

11-1352000-001638-01

사회보장 재정추계 발전방향 모색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반강화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손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백승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사회보장 재정추계 발전방향 모색」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주관연구기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신화연

목 차

요약	1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1
제2장 사회보장 재정추계 현황과 한계	5 2
제1절 2013년 사회보장 재정추계	7 2
제2절 사회보장 재정추계 현황과 한계	4 5
제3장 재정추계 발전방향(안) 모색	9 5
제1절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지출범주 설정	1 6
제2절 사회보험 재정추계	17
제3절 재정추계 발전방향(안) 모색	8 9
제4장 결론 및 향후과제	1
참고문헌	117
제5장 부 록	119
[부록 1] 특수직역연금 재정재계산 관련 근거 및 추진현황	9 1 1
[부록 2] 주요국의 장기재정전망 요약	321

표 목차

〈표 1-1〉 사회보장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의 장기재정전망 비교	3	2
〈표 2-1〉 2013년 예산기준 OECD SOCX 정책목표별 사회보장지출 범주	1	3
〈표 2-2〉 추계모형구축 이외 일반재정지출 추계방법	2	4
〈표 2-3〉 사회보장지출 전망(GDP 대비)	4	4
〈표 2-4〉 사회보장지출 전망	5	4
〈표 2-5〉 사회보장지출 전망 (구성비 %)	6	4
〈표 2-6〉 사회보험지출 전망 (GDP 대비 %)	6	4
〈표 2-7〉 사회보험지출 전망	7	4
〈표 2-8〉 일반재정지출 전망	8	4
〈표 2-9〉 OECD SOCX 9대 정책영역별 복지지출 전망	0	5
〈표 2-10〉 OECD SOCX 9대 정책영역별 복지지출 전망 (GDP 대비)	0	5
〈표 2-11〉 OECD SOCX 9대 정책영역별 복지지출 전망 (구성비 %)	1	5
〈표 2-12〉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제도유형별 복지지출 전망	3	5
〈표 2-13〉 현금 및 현물급여별 복지지출 전망	4	5
〈표 3-1〉 OECD SOCX 공공지출 기준을 적용한 사회보장지출 분류	0	7
〈표 3-2〉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시 고려하는 급여종류	6	7
〈표 3-3〉 거시경제변수 전망결과(2014년말 전망)	9	7
〈표 3-4〉 특수직역연금 재정전망을 위한 임금상승률	0	8
〈표 3-5〉 공무원수 전망	2	8
〈표 3-6〉 공무원 신규가입자 성비	3	8
〈표 3-7〉 공무원연금 기타수입 전망을 위한 비율 가정	4	8
〈표 3-8〉 사학연금 제도내 인구수 전망	1	9
〈표 3-9〉 군인연금 연금수급자수 전망	6	9
〈표 3-10〉 사회보장 재정추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추진과제(안)	0	0
〈표 3-11〉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등 재정추계모형 개발 (3개년도)	8	0
〈표 3-12〉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제도별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따른 주요기대효과	9	0
		1

그림 목차

[그림 2-1] 사회보장지출 전망 (GDP 대비)	4	4
[그림 2-2] OECD SOCX 9대 정책영역별 복지지출 전망 (GDP 대비)	1	5
[그림 2-3] OECD SOCX 9대 정책영역별 복지지출 전망 (구성비)	2	5
[그림 3-1]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개요	4	7
[그림 3-2]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흐름도	5	7
[그림 3-3] 공무원수 전망방법	1	8
[그림 3-4] 사학연금 장기재정추계 개요	5	8
[그림 3-5] 사학연금 가입자수 전망	6	8
[그림 3-6] 사학연금 수급자수 전망	7	8
[그림 3-7] 사학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수 전망	8	8
[그림 3-8] 사학연금 급여지출 전망	9	8
[그림 3-9] 사학연금 생명표	0	9
[그림 3-10] 군인연금 장기재정추계 개요	3	9
[그림 3-11] 군인연금 수입전망	4	9
[그림 3-12] 군인연금 지출전망	5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차원의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격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의해 2013년에 이어 2015년 재정추계 작업 시행 중
 - － 추계범주, 추계기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재정·통계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정부차원의 공신력 있는 재정추계를 위한 시행지침 마련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2013년 재정추계를 시행하기 전부터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등 별도의 법률에 따라 장기 재정추계를 시행하고 있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등 사회보험은 소관 부처의 전망결과를 원용하도록 함.
 -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세 등 총수입과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을 포함한 중앙정부 전체 지출 등 국가채무, 재정수지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
 - － 이를 위해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장기 재정전망협의회를 운영 중
 - 사회보장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의해 정부차원에서 발표하는 전망결과에 대한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후발주자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기존 전망결과를 인정하여 그대로 원용하도록 되어 있음.
 - － 따라서 협의회와 일치하는 8대 사회보험*과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협의회 전망결과 원용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국가재정법에 의한 중앙정부 기준 총수입과 총지출 등 장기전망은 최소 5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16년말 이전에 발표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5년 12월 4일 최초로 발표한 바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와 추계주기가 서로 달라 국가재정법에 의한 장기전망 비추계 시점에서 사회보장 재정추계 시행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에 의한 중앙정부에 대한 장기전망 추계시점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현행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운영지침으로는 한계가 있음.
- 국가재정법과 별도로 8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제도별로 독립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주기적으로 재정계산제도 운영
 - 장기재정전망을 시행하거나 발표한 바 없었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협의회 산하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추계 수행
- 국가재정법과 추계시점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공적연금의 경우 제도별로 재정추계주기가 서로 달라 정부차원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조율 및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2013년은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시점이 일치하여 2013년 사회보장 재정추계에서는 이를 원용하였으나, 2015년은 국민연금재정 비추계 시점이므로 2013년 전망결과를 그대로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기준 설정 필요
- 한편 국가재정법과 추계시점이 일치하더라도 8개 사회보험과 기초연금에 대한 전망방법론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의견 조율 및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체계로서는 사실상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음.
 - 세부지침에 의하면 국가재정법의 전망결과를 원용하되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방법론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 위원회에서 방법론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피드백 등에 대한 과정 보호
-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기반을 확립하고 2차례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수행하면서 제기된 바 있는 현행 운영방안에 대한 한계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우리나라 전체 사회보장재정에 대한 장기재정추계 전반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격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차례 재정추계를 시행하면서 이미 발생한 정책 현안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재정추계 기틀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2013년과 2015년 재정추계 수행체계 및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한계점 제시
 - 사회보장기본법상 2년 주기의 사회보장 재정추계(사회보장위원회)와 국가재정법에 의해 최소 5년 마다 실시하는 장기재정전망(기획재정부)과의 관계설정 필요
 - 2013 사회보장 재정추계에서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거시경제변수 가정과 8대 사회보험 전망결과를 원용한 바 있으나,
 - 협의회의 경제변수 가정, 건강보험 지출추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재정추계 등에 대해 2013년 추계소위에서 이견 제시
 - 사회보장 재정추계 전반에 걸친 과정과 결과발표 등에 있어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정부부처 등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목적과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등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
- 사회보험 재정추계 방법론(수입 및 지출 등) 검토 및 사회보장위원회 독자 모형 구축방향 모색
 - 2013년 재정추계시 건강보험, 특수직역연금 등 사회보험과 일반재정 등 추계

방법론 검토 및 개선방향을 논의한 바 있음.

- 2013년 사회보장 재정추계시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각 제도별 추계위원회 결과를 원용하고 모형 및 주요가정변수 등 추계방법에 대하여 추계소위에서 발표하였으나,
- 추계소위(또는 전문위원회)에서 각 제도별 재정추계 전망결과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음.

○ 전체 사회보장재정 중 사회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회보험 재정추계모형과 제도관련변수 가정 등에 따라 사회보험 재정추계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방법론 측면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 제기

- 전망결과발표는 소관부처의 발표자료를 반영하되, 사회보장 재정추계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 독자적인 모형 구축 필요성 검토

○ 2013년 사회보장 재정추계 시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각 제도별 추계위원회 결과 원용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험 등 분야별 재정추계결과를 원용하고, 전망결과는 8개 사회보험을 합산한 GDP 대비 비율 공개

2. 주요 연구내용

가. 사회보장 재정추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본목표 설정

□ 사회보장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토대로 정책수요에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분석자료 제공

○ 위원회에서 재정추계 방법론, 제도개선방안, 재정전망 및 분석 등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구축

○ 사회보장 재정추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기존 재정추계의 시행과정 및 결과활용 등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실제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통해 중장기적

으로 재정추계 기반강화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재정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의 개편방안 모색시 다양한 기초자료 생산
 -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경제여건 하에서 국민연금 제도성숙, 기초연금지출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중장기 사회보장재정 전망결과 자료 제공
 - 사회보장제도가 급변하는 만큼 제도 변화와 정책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형 개선
- 정부차원의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해서는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통해 추계의 방법 및 가정설정 및 가정변화에 따른 재정분석
 - 사회보장 재정추계 모형구축을 통해 기본시나리오와 함께 인구경제변수 및 주요정책변수 등 가정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기존 재정추계 사후평가 및 차기 재정추계 대비 사전점검과 관련 이슈 대처가 가능하도록 모형 개발
- 현재와 미래의 사회보장지출 수준, 구성, 증가패턴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때 사회보장지출 전망과 함께 자원별 부담수준 등 재정적 지속가능성 점검을 위한 분석
 - 이를 위해 사회보장 재정추계결과를 토대로 지출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수준, 자원부담 등 재정여건 분석을 위한 방법론 연구
 - 향후 증가할 지출수준에 대비한 부담수준, 자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논의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 재정평가지표 모색
 - 지출증가에 따른 부담수준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인상 등 사회보험 제도개선, 국가재정수지와 국가부채 등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모색
 - 향후 증가할 사회보장 지출에 대비한 국민부담수준 분석을 위해 GDP 대비 조세수입(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수준(사회보장부담률)에 대한 논의의 토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현재와 미래의 급여수준과 대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출구조 변화와 급여수준의 적정성 등 심층분석
 - 재정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급여수준의 변화와 노령·근로계층 등 수급대상별 지출구조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분석
- 사회보장재정의 재정평가 및 사회보장재정의 발전경로와 환경변화에 대한 해외 주요국 사례 비교 및 시사점 도출
 - 전체 국가재정과 사회보장재정으로 국한할 경우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기준과 재정목표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
 - 해외 주요국 사회보장재정의 발전경로와 환경변화 비교 분석
- 사회보장제도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재정과 기초연금 등 일반세출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사회보장재정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제도별·제도간 복잡성을 보다 정교하게 구현하기 위한 모형 고도화
 - 사회보장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중장기 측면에서 재정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적정 부담수준 등 재정여건 분석을 위한 사회보장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모색
 - 사회보장재정이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정책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사회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보장과 경제 선순환 지출구조 분석을 위한 모형 구축 및 방법론 연구

나. 재정추계 발전을 위한 운영방식 개선

-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회보장기

본법의 재정추계 원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재정추계 중장기 발전 방향 모색

□ 차기 사회보장재정추계를 위해서는 사전 점검 및 현안 반영 등이 필요한데, 이는 위해서는 다년에 걸친 연구가 중장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013년과 2015년 등 기존 재정추계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계방법론 및 모형을 보완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 예로,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등 모형구축, 순사회복지지출 범주에 따른 장기전망, 사회보장지출증가에 따른 부담수준 분석 등 주요이슈는 상당한 연구기간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연구과제 수행이 뒷받침 되어야 함.

○ 차기 재정추계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이슈를 점검하고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별로 매년 연구계획 수립하여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2013년과 2015년 등 기존 재정추계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근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형 개선이 필요하므로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

□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제도 안정성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심층분석

○ 재정추계 시행연도에는 사실상 장기재정추계 방법론과 전망결과를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비추계연도에는 전망결과를 활용한 심층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비추계연도에 심층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격년마다 시행하는 재정추계시 마다 필요성 제기

- 지출구조 변화와 함께 노인 근로계층 등 세대내 세대간 대상자별로 급여 수준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 모색
 - 장기 재정추계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근로계층과 노인세대간 급여지출 적정성, 세대간·세대내 사회보장급여의 우선순위, 사회보험재정과 일반예산의 지출비중의 적절성 등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주요 국정과제 추진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지출증가에 따른 부담수준 등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여건 진단 및 정책과제 제시
 - 우리나라 사례와 함께 OECD 등 주요국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제도성숙 시점 등을 함께 연계하여 사회보장재정의 과거 발전경로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 해외사례 연구 필요
- 차기 사회보장재정추계 대비 모형 보완 및 고도화, 심층분석 등 재정추계 기반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추진 및 이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예산 확대 등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기존 재정추계에서 제기된 바 있는 이슈와 최근 제도변화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형 보완 및 방법론상 개선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 및 예산 확대 필요
 - 국가재정법상 최소 5년마다 시행하는 장기재정전망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장기전망센터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데, 연구사업 계약체결이 아니라 매년 센터운영비 13억원으로 추계작업 수행
 - 추계연도 뿐 아니라 비추계 연도에서도 재정추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모형 고도화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지속적으로 운영
 - 재정·통계전문위로 합쳐지면서 재정추계과정 전반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로 확대구성된 자문단 주기적으로 운영

- 자문단은 재정추계모형 구축, 심층분석, 재정추계결과 활용방안 등 주제별로 그룹화하여 논의 활성화

다.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등 재정추계 모형개발

□ 그간 2차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시행한 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추계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재정추계 주체간 재정추계 주기*와 지출추계 범주, 목적 등이 서로 상이한데, 재정추계 결과의 정합성을 위해 사회보험의 경우 소관 기관별로 추계결과 원용

- 추계 주기: 사회보장재정추계 2년(2013년 부터), 장기재정전망 5년(2015년 최초 시행), 국민연금 5년(2018년 예정)

○ 사회보험 제도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별 분석 등이 제외되고, 사회보험료와 재정수입 등 수입을 배제한 총 지출 규모만 추계

- 중앙정부재정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에 목적이 있는 재정전략협의회의 장기전망과 달리,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사회보장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추계목적에 차별성이 있음.

- 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지출 및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관리에 목적이 있는 반면, 사회보장위원회 재정추계는 사회보장제도로 한정하여 지출의 구성과 수준, 재원부담 등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개선안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음.

* 협의회도 사회보장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의 경우 각 소관기관별 수입과 지출 전망결과 원용

□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보다 전문성이 높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반 강화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재정추계 취지에 부합하는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 추계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데 활용하고자

중장기에 걸쳐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재정추계 모형 개발

- 사회보험 재정추계 방법론에 대한 검토 및 전망결과에 대한 방법론 인구 재정추계의 기초가 되는 가정변수, 추계범위, 추계모형·방법 등의 검토 및 설정시 논의의 활성화 및 기초자료 제공차원에서 자체 모형 개발 필요
 - 현행 제도 유지에 따른 기본 시나리오만 전망하고 인구·거시경제변수 가정 및 제도관련 변수 가정변화에 따른 시나리오와 민감도 분석 부재
 - 2013년과 2015년 전망결과에 대한 비교 및 요인 분석 등 해석 필요
- 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반을 강화하고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재정추계모형 개발을 3년에 걸쳐 연속 과제로 수행
 - 모형의 기본틀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논의의 활성화와 기존에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재정추계를 고려하여 재정추계 방법론은 각 제도별 담당기관의 모형을 기본으로 함.
 - 모형의 기본틀을 완료한 후 추후과제로 각 제도별로 우리나라 제도의 특수성 및 실적자료의 축척 등을 고려하여 방법론상 보완방안 모색
- 1차년도 연구로는 2015년 재정추계시 주요 이슈가 된 바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추계 방법론을 검토하고 담당기관의 기존 방법을 토대로 모형 개발
 - 2013년과 마찬가지로 2015년에도 사회보험과 기초연금은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전망결과 원용하도록 하였으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출전망의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에 전망한 경제변수 가정을 반영한 전망결과 제공
 - 기초연금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달리 2014년 경제변수가정을 적용하되,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는 기초연금 매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로 가정하여 법상 5년마다 노인생활수준 및 빈곤 등을 반영하여 재평가한다는 내용 미반영

- 고용보험은 2013년과 2015년 사회보장 재정추계시 모형이 서로 다르고, 2013년에는 주기적으로 외부 경제위기 쇼크를 반영한 반면 2015년에는 최근 지출증가 추세를 따르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일반재정 LMP 사업 포함)에 대해 재정추계 방법론, 분석을 위한 가정, 전망결과 등 2013년과 2015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고용보험 재정추계 방법론 비교 분석
 - 국민연금 등 모형 보완, 경제변수 및 정책변수 가정 등 변화 요인별 분석
 - 모형 보완, 경제변수 및 정책변수 가정 등 변화 요인별 분석
- 2차년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 3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사회보험제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산재보험에 대한 재정추계 모형 개발
- 건강보험의 경우 장기전망방법론 및 가정설정 등에 대해 2013년과 2015년 재정추계시 마다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특히 소득탄력도,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건강수명 등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지출규모가 큰 폭으로 달라져서, 가정변수 별 민감도 분석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3년에 비해 2015년 재정추계시 2014년 7월 장기요양보험 등급개편을 반영하여 장기전망
 - 등급별 수급률 등 가정변화에 따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등급개편이후 실적분석을 통해 제도관련 변수 가정 검토
- 건강보험지출은 OECD(2012) 방식을 따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EU방식, 이를 모두 포괄하는 공공의료비와 국민의료비 지출은 OECD(2012) 방식
 -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가정 설정과 각 개별 제도간 가정설정은 서로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전망하고 있어 의료비 지출 추계시 의료급여 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제도간 연관성 등 검토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최근 이루어진 법개정 반영 및 보수인상률 가정 등에 대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모형 개발
 -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2015년 개정법을 반영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원용한 바 있으나, 법개정 내용을 어떠한 식으로 반영하였는지 가정변화 및 모형 수정에 대한 검토없이 전망결과 원용
 - － 3대 특수직역연금의 보수인상률은 민간근로자의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가정을 반영하여 기본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어 타 제도간 비교 및 전체 사회보장지출 수준 전망에 있어 한계가 있음.
 - － 보수인상률 등 가정변화에 따라 재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민간근로자의 임금상승률과 동일하게 가정할 경우 각 제도별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점검
- 산재보험은 사실 정부에서도 2013년 처음으로 장기재정추계 모형을 개발하는 등 타 영역에 비해 방법론 등 보다 근본적인 검토 필요
 - － 재해율 수준 및 개선시기 등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지출 및 수입 등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주요 가정변수에 대한 검토 및 가정설정 등에 대한 근거 마련
- 2차년도에는 2016년 발표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하여 경제성장률, 물가, 금리, 경제활동참가율 등 거시경제변수 장기전망 방법론 검토
- 물가, 중요소생산성, 노동공급, 자본스톡 등 거시경제지표 장기전망시 인구구조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 모색
 - － 그간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시 경제변수가정은 기획재정부의 협의회 전망결과를 원용하였으나 2015년말 국가재정법상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여 최소 5년 후 발표예정으로 비추계기간에는 경제변수가정을 전망
- 2차년도에 이어 3차년도에는 장래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경제성장률, 물가, 금리, 경제활동참가율 등 거시경제변수 장기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기존에 구축된 8대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등 모형 안정화를 위한 수정보완하여 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본틀 구축 완료

- 2차년도에서 검토한 거시경제변수 장기전망 방법론에 따라 모형을 구축하여 2013년과 2015년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와 비교 등
- 8대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등 개발된 모형에 대해 기초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최근 도입되거나 제도변화에 따라 실적자료 분석 등을 통해 기초을 재검토
 - 예를 들어 사학연금의 경우 2016년 사학연금 재정계산시 개선된 방법론을 반영한 모형 개선 및 사립대학병원으로 사학연금 가입대상 확대 등 반영, 군인연금법 개정시 이를 반영한 모형 수정 등
- 거시경제변수 가정변화를 반영한 8대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 재정 전망결과 시산결과 검토
 - 각 모형별로 개발자를 제외한 외부전문가 모형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모형 수정 보완

라. 결론 및 향후과제

- 본 연구는 사회보장재정추계 전반에 대한 시행과정을 살펴보고 추계기간과 추계범주 등 재정추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추계 발전을 위한 향후과제를 살펴보았음.
-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재정추계인 만큼 특수직역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추계방법론 검토를 통해 신뢰성을 보다 높이고 재정추계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 재정추계시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각 제도별 추계위원회 결과를 원용하고 모형 및 주요가정변수 등 추계방법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하는 형태를 통해 검토한 바 있음.
- 전체 사회보장재정 중 사회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회보험 재정추계모형과 제도관련변수 가정 등에 따라 사회보험 재정추계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방법론 측면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관련된 핵심과제는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고령화 요인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나아가 평균수명 및 출산율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있음.
 - 평균수명 및 출산율 등 인구관련 전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결과를 원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에 이어 2016년에 인구추계를 발표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인구추계결과에 따라 성장률, 노동시장 등 거시경제변수 관련 전제 또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됨.
 - 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재정추계에서는 2016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및 이를 반영한 거시경제변수 전망 등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음.
- 장기재정추계의 시행 목적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 재정목표나 평가기준 모색 필요
 - 사회보장 재정수입은 일반적으로 세금, 사회보험료, 국가부채 등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공정한 복지정치를 위해 구체적으로 추계된 수치를 국민들 사이에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치적 소통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추계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 활용방안측면에서 장기전망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제공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인구고령화와 공적연금제도의 성숙으로 인해 노령정책 관련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사회보장재정 전망결과를 토대로 적정지출수준과 국민부담 등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향후 한국형 사회보장제도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정부차원에서 보다 신뢰성 높은 전망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공론화할 필요

- 특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방향 모색
- 지출증가에 따른 부담수준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인상 등 사회보험 제도개선, 국가재정수지와 국가부채 등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는 모형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 향후 증가할 사회보장 지출에 대비한 국민부담수준 분석을 위해 GDP 대비 조세수입(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수준(사회보장부담률)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음.
- 사회보장 재정추계 전반에 걸친 과정과 결과발표 등 거버넌스 관점에 있어 「장기 재정전망협의회」 및 관련 정부부처와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험은 8개 제도별로 전망결과와 장기전망을 위한 가정 등 전망과정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점검하고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제도의 특성상 중장기간에 걸친 전망결과를 분석하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법론과 관련 가정을 살펴보고 전망결과를 분석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음.
 - 사회보험재정에 대해서는 기본시나리오에 대한 전망결과발표는 정부의 전망결과를 반영하되, 기초율 가정과 재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자체 모형 개발의 필요성 대두
-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 등 사회보장 기본법의 재정추계 목적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필요
 - 그간 2차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시행한 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인 운영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추계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함

- 재정추계 주체간 재정추계 주기*와 지출추계 범주, 목적 등이 서로 상이한데, 재정추계 결과의 정합성을 위해 사회보험의 경우 소관 기관별로 추계결과와 원용
 - *추계 주기: 사회보장재정추계 2년(2013년 부터), 장기재정전망 5년(2015년 최초 시행), 국민연금 5년(2018년 예정)
- 사회보험 제도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별 분석 등이 제외되고, 사회보험료와 재정수입 등 수입을 배제한 총 지출 규모만 추계하는데 기인함
- 중앙정부재정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에 목적이 있는 재정전략협의회의 장기전망과 달리, 사회보장 재정추계 는 사회보장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추계목적에 차별성이 있음.
 - 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지출 및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관리에 목적이 있는 반면, 사회보장위원회 재정추계는 사회보장제도로 한정하여 지출의 구성과 수준, 재원부담 등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개선안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음.
 - * 협의회도 사회보장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의 경우 각 소관기관별 수입과 지출 전망결과 원용
 - 따라서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보다 전문성이 높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재정추계 기반강화 방안 모색 필요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재정추계 취지에 부합하는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 기반강화 방안 모색 필요
 - 사회보장 지출수준 및 재원부담,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에 관한 논의·분석이 가능한 독자적인 재정추계모형 구축과 추계범위 확대, 사회보장 재정추계 전담기관에 대한 예산 등 지원강화 방안 마련 필요

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해 2013년 정부차원에서 최초로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실시

○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사회보장 재정전망결과를 토대로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가할 사회보장지출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제도 개선방향 모색시 기초자료 제시

< 사회보장기본법의 재정추계 >

- (추진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함

- (주요내용) 재정추계를 통한 재정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 정부차원의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격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의해 2013년에 이어 2015년 재정추계 작업 시행 중

- 추계범주, 추계기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재정·통계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정부차원의 공신력 있는 재정추계를 위한 시행지침 마련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2013년 재정추계를 시행하기 전부터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등 별도의 법률에 따라 장기 재정추계를 시행하고 있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등 사회보험은 소관 부처의 전망결과를 원용하도록 함.

○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세 등 총수입과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을 포함한 중앙정부

전체 지출 등 국가채무, 재정수지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

- 이를 위해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장기 재정전망협의회를 운영 중

<국가재정법 장기재정전망>

-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조 중장기 재정전망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을 할 때에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의해 정부차원에서 발표하는 전망결과에 대한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후발주자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기존 전망결과를 인정하여 그대로 원용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협의회와 일치하는 8대 사회보험*과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협의회 전망결과 원용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국가재정법에 의한 중앙정부 기준 총수입과 총지출 등 장기전망은 최소 5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16년말 이전에 발표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5년 12월 4일 최초로 발표한 바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와 추계주기가 서로 달라 국가재정법에 의한 장기전망 비추계 시점에서 사회보장 재정추계 시행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에 의한 중앙정부에 대한 장기전망 추계시점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현행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운영지침으로는 한계가 있음.
- 국가재정법과 별도로 8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제도별로 독립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주기적으로 재정계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장기재정전망을 시행하거나 발표한 바 없었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협의회 산하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추계 수행
- 국가재정법과 추계시점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공적연금의 경우 제도별로 재정추계주기가 서로 달라 정부차원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조율 및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2013년은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시점이 일치하여 2013년 사회보장 재정추계에서는 이를 원용하였으나, 2015년은 국민연금재정 비추계 시점이므로 2013년 전망결과를 그대로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기준 설정 필요
- 한편 국가재정법과 추계시점이 일치하더라도 8개 사회보험과 기초연금에 대한 전망방법론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의견 조율 및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체계로서는 사실상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음.
 - － 세부지침에 의하면 국가재정법의 전망결과를 원용하되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방법론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 － 위원회에서 방법론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피드백 등에 대한 과정 모호
-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기반을 확립하고 2차례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수행하면서 제기된 바 있는 현행 운영방안에 대한 한계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우리나라 전체 사회보장재정에 대한 장기재정추계 전반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격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차례 재정추계를 시행하면서 이미 발생한 정책 현안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재정추계 기틀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2013년과 2015년 재정추계 수행체계 및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한계점 제시

- 사회보장기본법상 2년 주기의 사회보장 재정추계(사회보장위원회)와 국가재정법에 의해 최소 5년 마다 실시하는 장기재정전망(기획재정부)과의 관계설정 필요
 - 2013 사회보장 재정추계에서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거시경제변수 가정과 8대 사회보험 전망결과를 원용한 바 있으나,
 - 협의회의 경제변수 가정, 건강보험 지출추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재정추계 등에 대해 2013년 추계소위에서 이견 제시
- 사회보장 재정추계 전반에 걸친 과정과 결과발표 등에 있어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정부부처 등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목적과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등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

〈표 1-1〉 사회보장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의 장기재정전망 비교

구분	사회보장재정추계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획재정부
소관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재정전략협의회 (위원장: 기재부장관+민간위원)
추진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4항 시행령 제2조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2호 시행령 제2조제3항
추계목적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	중앙정부재정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추계기간	추계소위에서 결정	최소 40 회계연도 이상
추계주기	2년	최소 5년 *2015년 최초 발표
추계범위	사회보장재정 전체* * 사회보험 + 중앙·지방정부의 공공부조·사회보상·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 예산
범위기준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연금·의료 등 고령화 관련분야
추진체계	-재정추계 소관부처 및 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계센터가 추계작업을 수행 -사회보장위원회 안전 상정을 위해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를 거쳐서 추계결과 발표	소관기관에서 분야별 전망작업을 추진하고 협의회는 이를 종합

□ 인구·경제변수 가정 및 시나리오 전망

- 2013년과 2015년은 장기재정협의회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원용하였으나 2년마다 시행하는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차원에서 거시경제변수를 전망하는 방안 모색
 - 필요에 따라 인구 및 경제변수 가정 시나리오 분석

□ 사회보험 재정추계 방법론(수입 및 지출 등) 검토 및 사회보장위원회 독자 모형 구축방향 모색

○ 2013년 재정추계시 건강보험, 특수직역연금 등 사회보험과 일반재정 등 추계 방법론 검토 및 개선방향을 논의한 바 있음.

- 2013년 사회보장 재정추계시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각 제도별 추계위원회 결과를 원용하고 모형 및 주요가정변수 등 추계방법에 대해서는 추계소위에서 발표하였으나, 추계소위(또는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검토없이 전망결과 원용에 대한 우려

○ 전체 사회보장재정 중 사회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회보험 재정추계모형과 제도관련변수 가정 등에 따라 사회보험 재정추계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방법론 측면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 제기

- 전망결과발표는 소관부처의 발표자료를 반영하되, 사회보장 재정추계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 독자적인 모형 구축 필요성 검토

○ 2013년 사회보장 재정추계 시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각 제도별 추계위원회 결과 원용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험 등 분야 재정추계결과를 원용하고, 전망 결과는 8개 사회보험을 합산한 GDP 대비 비율 공개

□ 미래 사회보장 지출 증가에 대한 부담 수준 등 사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한 재정추계 수행체계 점검 및 발전방향 모색

○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를 토대로 향후 인구고령화 및 연금제도의 성숙 등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지출 증가로 인한 국민부담수준, 재원부담 등 재정여건 분석 필요

○ 사회보장 지출증가에 따른 부담수준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제도개선(보험료 인상 등), 국가재정수지관리 등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등 통합적인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중장기 관점에서 개선방향 제시

제 2 장

사회보장 재정추계 현황과 한계

제1절 2013년 사회보장 재정추계

제2절 사회보장 재정추계 현황과 한계

2

사회보장 재정추계 현황과 한계 <

<

제1절 2013년 사회보장 재정추계

1. 2013년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목적 및 배경

- 미래 사회보장지출 증가를 고려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질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가 시행된 바는 없음.
 - 사회보장재정의 장기지속가능성을 토대로 한 제도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보다 신뢰성 있는 재정추계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13년 1월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제5조제4항) 및 시행령(제2조)에 의해 2013년 처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재정추계를 시행하고 전망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사회보장재정추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직속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원회 신설
 - 재정추계 모형구축 및 추계소위 운영지원 등을 위해 사회보장재정추계센터를 본원에 설치함.
- 2013년 사회보장 재정추계에서는 주요분야별 재정추계모형을 구축하고 주요가정변수 설정 등 추계방법 검토를 통해 재정추계결과를 제시하고 전망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음.
- 향후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위해 추계모형을 개발하고 제도별 주요가정변수 설정 및 변수간 상호관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추계방법론 검토
-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를 통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수준 및 지출구조 분석

및 OECD 등 주요국과의 국제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사회보장지출 범주

-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사회보장지출 범주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OECD 사회복지지출(SOCX) 중 공공부분에 대해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기타 등 9대 정책영역별로 사회보장제도 분류
- OECD SOCX 작성지침은 확고한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 2013년 예산기준으로 세부사업들을 OECD SOCX 정책영역별로 분류 시, 근본적인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포함여부를 결정함.
- 노령정책영역은 노령연금에 관한 모든 현금 지출(일시금 포함)로 구성됨.
 - 노령현금급여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을 제공하거나 ‘법정’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거나 노령연금 기여의 필수요건을 완수한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임.
 - 부양자가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지불되는 부양자에 대한 보조금도 포함되며, 또한 조기은퇴연금을 포함함.
 - 돌봄서비스,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 다른 현물 급여 등 노인서비스에 관한 지출 및 기관에서 시설보호(예. 노인 그룹홈 운영비 등)에 이용되는 지출 등도 포함함.
- 유족정책영역은 배우자나 부양자가 사망한 사람들에게 공적영역에서 급여(현금 혹은 현물)를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
 - 현금급여에는 유족급여 수급자의 수당과 부양자에 대한 보조금과 기타 현금급여가 해당하고, 현물급여에는 장제비와 기타 현물급여가 있음.
- 근로무능력정책영역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다 장애로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근로무능력을 가질 때 지급하는 급여로 구성

- 유급질병휴가, 특별 수당과 연금과 같은 장애 관련 지급금 등 산업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지출, 질환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로무능력으로 야기된 소득의 상실과 관련한 현금급여 등이 포함
 - 부양 아동의 질병이나 부상과 관련하여 지급된 급여는 가족영역으로 의학적인 보호에 대한 공적인 지급금은 보건영역으로 분류되고 근로무능력 급여에서는 제외
 - 또한 돌봄서비스와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 다른 현물 급여 등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지출을 근로무능력정책에 포함
- 보건정책영역에서 사회지출통계는 OECD Health Database 이용
- 보건지출은 개인의료서비스와 집합보건의료서비스, 투자 등으로 구분
 - 입원환자요양서비스, 보조의료서비스 및 약품에 관한 지출이 포함되고, 공공기관의 용자 상황은 미포함
 - 자발적 민간 보건지출은 재분배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민간의료플랜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만 추정(이러한 종류의 민간의료보험플랜은 주로 고용에 기반을 두거나 조세 혜택이 있음)
- 가족정책영역에는 가족을 지원하는 지출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과 다른 부양자의 지원과 관련된 비용 포함
- 현금급여에는 가족수당과 산전후와 육아휴직 관련 지출, 기타 현금급여들이 포함되고. 현물급여에는 돌봄서비스와 가사보조서비스, 기타 현물급여 포함
 -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 대한 지원에서 국제 비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취학아동에 대한 지출은 배제
-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은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를 찾는 수급자의 가능성의 개선이나 그들의 소득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모든 사회지출(교육 이외) 포함
-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공공 고용서비스와 행정, 노동시장 훈련, 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환하는 청년에 대한 특별한 정책, 실업자와 기타 사람들(청소년과 장애인 제외)의 고용을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지출 포함

○ 실업정책영역은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 지출 포함

- 기업의 도산 및 감축으로 인해 해고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정리해고수당 및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실직이나 노동시장정책 때문에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공적 자원 포함

○ 주거정책영역은 임대료 또는 주거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포함

- 임대주택에 배정된 사람들에게 대해 주거비용 보조로 ‘꼬리표를 붙인’ 직접적인 공공 보조 포함
- SOCX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즉시적으로 제공하는 직접적인 현물 주거급여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포함
- 주거부문의 추계에 있어서 이슈는 모기지론, 건설에 대한 자본 보조, 그리고 주거시설 비용에 대한 암묵적인 보조 등과 같은 주거 지원의 다른 형태들의 포함 여부임.

○ 기타 사회정책(Other social policy areas)은 다양한 이유로 관련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제공되거나 다른 급여들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제공되는 지출과 다른 항목에서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지출 포함

- 이민자와 탈북자, 토착민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이 이에 해당함.

〈표 2-1〉 2013년 예산기준 OECD SOCX 정책목표별 사회보장지출 범주

구분	9대 정책영역	2013년 예산기준 (128조원)
1. 노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노령연금 등 급여(조기은퇴포함) 돌봄·재활·일자리 등 노인서비스 예) 국민연금(노령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퇴직급여·퇴직수당),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등 	31조원 (24.2%)
2. 유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나 부양자가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유족연금 등 급여 예) 국민연금(유족연금·사망일시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유족연금·유족일시금·사망조위금), 보훈급여(보상금·수당) 등 	2조원 (1.9%)
3. 근로 무능력 관련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로 인해 (부분 또는 완전) 근로무능력 발생시 제공되는 급여 예) 국민연금(장애연금·장애일시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재해보상급여, 상이연금), 산재보험(휴업·장해·간병·직업재활급여 등),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선택적복지, 보훈급여(상이군경) 등 	7조원 (5.5%)
4.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의료비 지출 및 보건의료관련 시설투자 등 공공보건지출 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요양급여) 등 	56조원 (43.8%)
5.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양육 및 기타 부양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및 가족관련 제공서비스 등 예) 보육·누리과정·아이돌봄 등 보육정책, 입양·실종·방과후활동·성보호·폭력 및 가출예방 등 아동·청소년 지원, 한부모·다문화·저소득가정 등 가족지원 등 	11조원 (8.6%)
6.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수급자의 고용환경 개선 및 소득능력 향상 예)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접일자리사업, 직업훈련사업, 고용서비스사업, 고용장려금사업, 창업지원사업,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사업 등 	8조원 (6.6%)
7. 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에 대한 소득보상과 해고수당 등 관련 급여 예) 고용보험(실업급여) 	4조원 (3.0%)
8.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시 주거급여 	—
9.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복지제도의 수급범주에 배제된 경우 임시로 제공되거나 기존 제도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복지욕구 발생시 제공되는 급여 예) 기초생활급여, 긴급복지,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지원, EITC 근로장려금, 임대주택지원,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 등 	8조원 (6.4%)

□ OECD SOCX는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을 “복지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치는 환경에 처한 개인과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기관이 급여를

제공하거나 재정적인 기여에 따른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함.

○ 급여와 재정적인 기여의 제공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직접적 지급이나 개별적인 접촉이나 이전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포함하지 않음.

–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만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가구간 이전은 포함하지 않음.

□ 급여의 조건으로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져야 하고, 다른 하나는 급여의 제공을 규정하는 프로그램은 개인간 재분배 혹은 의무적인 참여와 관련되어야 함.

○ 급여를 제공할 때 전달체계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은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비용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하지 않음.

– 그러나 서비스 제공과 분리할 수 없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아동보육서비스, 보건의 경우 행정비용이 합계에 포함됨.

– 이들 데이터의 원자료는 각각 OECD Labor Market Policy database, OECD Education database, OECD Health database의 독립적인 개념과 정의에 의해서 추출됨.

○ 건설비용과 같은 자본투자는 자연증가에 기초하여(accruals basis) 포함함.

– 예를 들어 장기요양기관(혹은 병원)을 건설하는데 4년간 100만달러(이자를 포함하여)가 지출되었다고 할 때 25만달러를 4년간 자본 투자 지출로 포함해야 함.

○ 일반적으로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금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자 지원을 받았다면 차감된 이자는 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할 수 있음(2011년 개정).

– 예를 들어, 대출이 무이자거나 사회보장의 목적으로 현재의 시장 비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한다면, 지원된 이자 혹은 차감된 이자는 사회적 급여에 포함될 수 있음.

- OECD SOCX 작성지침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 행정비용 등 범주 구분 시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경우 급여의 양 또는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포함여부를 결정함.
 - 현금급여와 관련한 사업운영비, 인건비 등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행정비용은 급여자체의 양과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음.
 - － 교육, 홍보, 행사 및 인식개선 등 의 비용과 ODA, 국제기구 분담금, 국제개발협력, R&D(연구개발) 비용 등 급여전달체계 비용 외의 행정비용은 공공 사회복지지출 범주에서 제외함.
 - 행정비용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급여의 양 또는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기준으로 현금급여의 전달에서 발생하는 자본축적은 포함하지 않고, 현물급여의 경우에는 포함함.
 - 연구개발비의 경우 급여의 양 또는 질을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모두에서 포함하지 않음.
 - 일회성행사는 급여의 양을 늘리거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금 및 현물급여 모두에서 포함하지 않음.
- 2013년 정부예산을 기준으로 OECD SOCX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 설정 및 9대 정책영역별로 분류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정책의 특성상 사업의 성격이나 대상이 부처별, 제도별로 겹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정책영역이 상이할 수 있음.
 - － OECD SOCX 9대 정책영역 중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은 SOCX와 별도로 DB를 운영함에 따라 타 정책영역 간 정책대상 및 기능 등이 일부 중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방안 검토할 필요 있음.
 - OECD SOCX 9대 정책영역 중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제외한 8대 정책영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을 모두 반영하여 추계하였음.(기존에는 적극적노

동시장정책의 경우 중앙정부 재정만 반영)

- 통계의 일관성 및 전체 공공사회복지지출 과소추계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정부 부담을 포함한 재정지출자료를 토대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부담을 포함하여 추계함.

○ 가족 정책영역 중 교육부 소관 사업 중에는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비용은 전부 반영하되, 취학이후에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만 반영

3.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 기간은 장기추계를 시행하는 해외국의 추계기간 설정 및 「장기재정전망협의회」와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60년까지로 설정

□ 재정추계를 위한 기본가정은 크게 인구전제, 거시경제변수, 제도변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추계시 사용된 인구전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0~2060) 결과 원용

○ 경제성장률, 실질금리, 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의 경우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가정 원용

○ 중장기 재정추계 기본안에 반영한 현행 제도는 2013년 예산기준 제도로,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단 기본안 추계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2014년 10월 시행예정인 맞춤형 급여체계 반영

□ 사회보장 재정추계시 반영한 지출의 범주는 OECD SOCX 공공사회복지지출을 기준으로 함.

○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9대 정책영역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보험 및 일반재정분야 지출 등을 포괄하여 추계

- 사회보험분야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노

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일반재정분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부조, 사회보상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출로 구성

□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사회보험분야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전망결과를 원용하고, 일반재정분야는 모형구축분야와 그 이외 분야로 구분하여 추계

○ 사회보험의 경우 추계모형 및 방법론은 공유하고, 재정추계결과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결과 원용

- 단, 2013년 예산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해보상급여 및 단기급여는 장기재정전망급여 대상에 속하지 않아, 추계센터에서 별도로 추계함.

○ 일반재정지출 중 모형구축 부문은 크게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정책, 보육정책으로 나누며 각 제도별 주요가정변수를 고려하여 추계함.

- 추계모형 구축분야 추계방법론의 경우 기초율로 적용되는 제도관련 주요가정변수를 설정하였음.

○ 추계모형구축 이외의 일반재정지출은 제도 특성 및 과거 실적치를 반영하여 추계방법론 및 증가율 가정을 설정함.

- 추계모형구축 이외의 일반재정지출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국가보훈급여, EITC(근로장려세제), 공공임대주택지원, 지방자체복지사업비, 기타 재정지출 등으로 구분함.
- 고용보험기금 사업을 제외한 일반재정지출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사업의 특성별로 분류하여 급여지출 증가율을 각각 다르게 설정함.
- 국가보훈급여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한 연령별 수당지급현황 자료를 토대로 향후 수급자수를 전망하고, 급여지출을 추계함.

□ 사회보험 및 기초노령연금은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결과 원용

○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전망결과를 원용하기로 한 사회보험 제도별 추계방법

검토

- 사회보험 전망결과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8개 제도를 모두 합산하여 표기

□ 일반재정지출(기초노령연금 제외)의 경우 장기급여를 중심으로 한 일부제도의 경우 추계모형을 구축하였고, 그 외 제도 특성 및 재정지출 규모에 따라 주요제도별로 구분하여 추계

○ 일반재정지출의 경우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경제성장 등 반영하여 추계

- 향후 저출산고령화 및 경제저성장 등의 영향을 받는 보육정책 및 장애인연금 등 장기성 급여의 경우 모형을 구축하여 지출추계

□ 추계모형 구축분야의 경우 장애인정책, 보육정책, 노인돌봄서비스로 구분하고, 각 제도변수관련 기초율을 고려하여 급여지출 추계

○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으로 구성하며 기초율로는 등록장애인수 증감률, 급여수급률, 1인당 급여 증가율, 급여수급자수 증감률 등이 있음.

○ 장애인연금의 수급자는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하위 63%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한다는 가정하에서 산정함.

- 장애인연금 급여지출 전망을 위해 기초급여액 및 부과급여액을 산정함.

○ 장애수당의 수급자는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수급자수는 6~64세 1,2등급 등록장애인 중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립생활을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하여 산정함.

○ 보육정책은 보육료지원(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보육돌봄서비스, 아이돌봄지원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제도별로 추계

- 보육료지원 급여지출은 제도별로 연도별·성별·연령별·인건비 지원시설 여

부로 구분한 지원대상자수에 1인당 급여액을 곱하여 산출함.

- 보육료지원은 0~5세 보육시설 이용자의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대상자에 포함됨.
- 1인당 보육료 지원액은 2016년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계획을 반영하고, 이후에는 급여지출 증가율인 경제성장률로 적용함.
- 장애아 보육료지원 대상자수는 12세 이하 장애아 중 어린이집 이용자수임.
- 시간연장 보육료지원 대상자수는 어린이집 최대운영시간 초과시 어린이집 이용자수임.

- 가정양육수당은 시설 미이용 아동수에 1인당 급여액을 반영하여 산출
- 보육돌봄서비스는 국공립과 영아 및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구분하여 인건비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
-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대비 국공립 및 영아 등 유형별로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수 비중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자수를 산정하고 지원단가는 경제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아이돌봄지원은 종일돌봄과 시간제 돌봄으로 구분하여 아동수 대비 각각의 이용률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자를 산출하고 지원단가는 경제성장률로 증가

○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유케어 시스템 운영으로 구성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의 대상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1인가구 중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수로 산정함.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의 수급률은 2013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대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급자수 3.0%가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인 자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구 중 서비스 이용대상임.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급률은 2013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대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급자수가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유지보수비 대상자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이용자 중 U-care 시스템 유지보수비 지원자임.
- 기초율인 유지보수 지원률은 2013년 기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급자수 대비 유지보수 지원자수 39.9%가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모형구축 이외의 일반재정지출은 제도 특성 및 과거 실적치를 반영하여 추계 방법론 및 주요 정책변수 가정 설정

○ 추계모형구축 이외의 일반재정지출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LMP), 국가보훈급여, EITC(근로장려세제), 공공임대주택지원, 지방자치복지사업비, 기타 재정지출 등으로 구분함.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4년 정부예산안에 10월부터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시 지출규모를 반영함.

-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지출규모는 2014년 정부예산안의 3개월 (10월~12월) 급여지출 및 국고보조율 가정을 반영함.
- 단, 제도개편 시 수급대상자수는 향후 인구변동과 상관없이 현행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 생계급여는 2014년 10월에는 가구중위소득의 27%로, 2015년에는 28%를 수급대상 및 급여지급 기준으로 선정함.
- 교육급여 수급대상의 소득수준은 중위소득의 50%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대상자가 확대됨.
- 주거급여의 경우 2014년 예산안을 반영하되 2015년에는 신규 자가 가구 3만가구를 반영(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하여 추계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후 급여지출 추계결과 2015년 급여지출은 2014년 대비 13.4% 증가하여 약 12조에 도달하였으며, 이 중 주거급여의 증가율이 34.7%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망결과 2013년 9.8조(GDP대비 0.74%)에서 점차 증가하여 GDP대비 0.77%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 고용보험기금 사업을 제외한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은 사업의 특성별로 분류하여 급여지출 증가율을 각각 다르게 설정함.
 - －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중 고용보험기금 사업의 경우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결과 원용함.
- 고용보험기금 사업을 제외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소득유지지원 사업으로 분류함.
 - － 직접일자리사업은 최근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2013년 지출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 － 직업훈련사업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고용보험기금사업 제외) 지출총액의 5%로 가정함.
 - － 고용서비스사업은 2014~2024년의 기간에는 2011, 2012년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증가율을 추정하고, 2025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을 적용
 - － 고용장려금사업은 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창업지원사업은 경제성장률을 증가율로 가정
 - － 소득유지지원은 3가지 세부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급자수 및 지원단가를 전망하여 급여지출규모를 산출함.
- 고용보험기금사업을 제외한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은 직접일자리사업을 제외한 지출규모는 점차 증가하나, GDP 대비 전체 ALMP 지출규모는 2013년 0.4%에서 2060년 0.2%로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이는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참가자수 감소 및 절반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추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국가보훈급여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한 연령별 수당지급현황 자료를 토대로 향후 수급자수 전망 및 급여지출 추계
 - － 국가보훈 보상금의 경우 최근 증가율인 5.99%를 향후에도 동일하게 적용

- 기타수당의 경우 수급자수 감소로 인해 급여지출액이 2030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 급여 전망결과 2013년 3.3조원(GDP 대비 0.25%)에서 점차 증가하여 2060년 35.4조원(GDP 대비 0.38%)에 도달하였는데, 이는 전체급여 중 보상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임.
-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4년에는 가구단위로 지급모델 변경 및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2015년에는 사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자를 확대함.
 - 근로장려세제의 개편을 반영하여 2017년 기준 2.5조원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 연간 동일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2013년 0.7조원(GDP 대비 0.05%)에서 개편안에 따라 2017년까지 대폭 확대되어 2020년에는 3.1조원(GDP 대비 0.14%)
 - 2020년 이후에는 GDP대비 0.14%를 유지하여 2060년에는 13.6조원으로 전망
- 2013년 예산을 반영한 OECD SOCX 주거정책영역(Housing) 복지지출은 임대료보조 및 주거비용 보조를 위해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지출을 의미함.
 -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SOCX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는 공공임대주택건설비용 및 매입비용,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 비용으로 제한함.
 - 기존의 통합급여가 아닌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는 2014년부터 ‘주거정책영역’으로 분류할 예정임.
- 2011년 개정된 OECD SOCX 작성지침에 의해 이차보전금은 2012년부터 반영할 예정이고, 암묵적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SOCX에 포함하지 않음.
 - 주거복지정책 중 이차보전, 감가상각비용 등에 대한 추계방법에 대해 OECD에서는 2014년 2월 개최예정인 전문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임.
 -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을 범주로 할 경우 향후 가구수 감소로 인한 주택공급량 감소를 반영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 추계시 한계가 있음.

- 통계청 장래가구수 추계는 2035년까지 전망하므로 가구당 가구원수(2035년 2.33명)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구수 추계할 경우 2036년부터 가구수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
 - － 공공임대주택 추계결과 2013년 1.5조원(GDP대비 0.11%)에서 2060년에는 4.5조원(GDP대비 0.05%)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지방자체복지지출 및 보건복지부 및 타부처 재량지출(기타재정지출)은 급여지출 증가율인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여 추계
 - － 지방자체복지(보건) 지출의 경우 GDP대비 지출 비중은 0.24%로 동일하나, 지출규모는 2013년 3.2조에서 2060년 22.3조원으로 점차 증가함.
 - － 기타재정 지출규모는 2013년 예산기준 7조원(GDP대비 2.3%)에서 GDP대비 비중은 2.2~2.3%로 동일하게 유지되나, 2060년에는 45조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됨.

〈표 2-2〉 추계모형구축 이외 일반재정지출 추계방법

구분	추계방법
기초생활 보장제도	○ 2014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2014년 10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지출규모를 반영하여 2014년 정부예산안의 3개월(10월~12월) 급여지출을 1년치 급여지출분으로 환산 - 제도개편시 수급대상자수는 향후 인구변동과 상관없이 현행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향후 급여지출 증가율 가정(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급여지출 규모 전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LMP)	○ 고용보험기금사업(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계결과 원용 ○ 고용보험기금사업을 제외한 일반재정지출사업 증가율 가정 - 직업일자리 : 2013년 지출규모 3,136십억원 (지방재정부담분 포함) 정액으로 반영 - 직업훈련 :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고용보험기금 제외) 지출총액의 5%로 가정 - 고용서비스 : 최근 증가추세를 따르다가 2020년대 후반 경제성장률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 - 고용장려금 : 임금상승률 - 창업지원 : 경제성장률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급자수 및 지원 단가 전망
국가보훈 급여	○ 보상금 - 급여지출 증가율은 최근 연평균 5.99%(2009~2013년)로 가정 ○ 수당 - 신규수급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현재 수당 수급자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 1인당 증가율은 최근 연평균 3.49%(2011~2013년) 적용
EITC	○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계획(2014~2017년) 반영 - 2018년부터 급여지출 증가율(경제성장률)로 가정
공공임대 주택지원	○ 2013년 예산기준 OECD SOCX 공공임대주택지원 및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 1.5조원 반영 ○ 통계청 장래가구수 추계(2035년까지)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지원 규모 추계 - 2035년 이후 가구수 및 가구당 구성원 수 등은 감소하나 재건축 및 노후주택개선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급여지출 증가율은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물가상승률로 가정
지방 자체복지	○ 증가율: 일반재정지출 급여지출 증가율(경제성장률)로 가정
기타 재정지출	○ 증가율: 일반재정지출 급여지출 증가율(경제성장률)로 가정

○ 일반재정지출 부문(기초노령연금 제외) 급여수준 및 인건비 인상률 가정은 추계소위에서 논의된 결과 (명목)경제성장률로 채택함.

- 급여수준 및 인건비 인상률 가정에 대해 추계소위에서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실질경제성장률의 1배, 1/2배, 1/3배 등), 보수상승률 등 의견 제기됨.

- 과거 실적치, 인구고령화 및 잠재성장률 등 사회·경제적 여건, 경제성장분배를 고려한 복지재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계소위에서 경제성장률로 결정함.
- 단, 기본안 추계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로 하되, 일반재정지출 실적자료 등을 토대로 ‘소비자물가상승률+(실질경제성장률/2)’ 안 등을 논의한 바 있음을 주석으로 언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물가상승률 적용은 저비용추계결과 부록 수록

4. 전망결과

- 장기재정추계 결과¹⁾,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보장지출 중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
- 2013년 GDP 대비 9.8%에서 2040년에는 22.6%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OECD 평균 수준(2009년 기준 22.1%)을 넘어서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에는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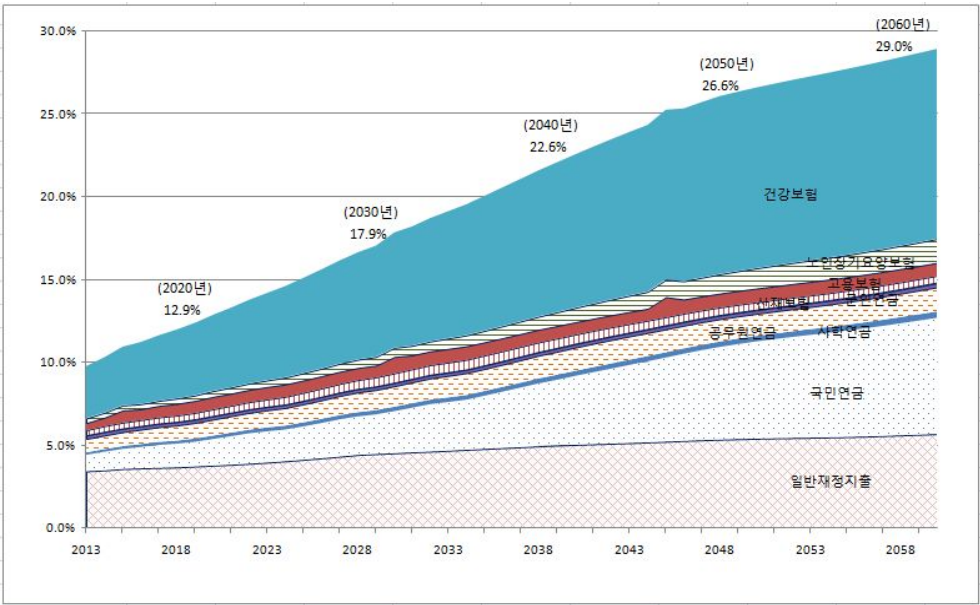
1) 장기재정추계를 시행하도록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2013년 정부차원에서 최초로 재정추계를 시행하였고 2014년 1월말 전망결과를 공표하였음. 2년마다 재정추계를 수행 및 발표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어 2013년 현행법을 기준으로 2060년까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장기재정추계

〈표 2-3〉 사회보장지출 전망(GDP 대비)

연도	합계 (가+나)	사회보험 (가)	일반재정지출 등			
			소계 (나)	기초노령연금	모형구축부문	기타
2013	9.8%	6.3%	3.5%	0.3%	0.8%	2.3%
2020	12.9%	9.1%	3.8%	0.6%	0.9%	2.3%
2025	15.1%	11.0%	4.2%	1.1%	0.9%	2.3%
2030	17.9%	13.3%	4.6%	1.5%	0.8%	2.2%
2035	20.1%	15.3%	4.8%	1.8%	0.8%	2.2%
2040	22.6%	17.5%	5.1%	2.2%	0.7%	2.2%
2045	25.3%	20.0%	5.3%	2.4%	0.7%	2.2%
2050	26.6%	21.2%	5.4%	2.6%	0.7%	2.2%
2055	27.7%	22.2%	5.5%	2.7%	0.6%	2.2%
2060	29.0%	23.2%	5.7%	2.8%	0.6%	2.3%

주: 1) 사회보험 및 기초노령연금 지출전망은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결과 원용
2) 모형구축부문은 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보육돌봄서비스, 아이돌봄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수당, 노인돌봄서비스
3) 기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ALMP(고용보험기금사업제외), 국가보훈급여, 공공임대주택, 기타지출, 지방자체복지사업

[그림 2-1] 사회보장지출 전망 (GDP 대비)



〈표 2-4〉 사회보장지출 전망

연도	합계 (가+나)	사회보험 (가)	일반재정지출 등			
			소계 (나)	기초노령연금	모형구축부문	기타
2013	130	84	46	4	11	31
2020	273	192	81	14	18	49
2025	425	308	117	30	24	63
2030	636	473	162	54	30	79
2035	872	662	209	80	34	95
2040	1,165	904	262	112	37	113
2045	1,534	1,214	319	145	41	134
2050	1,885	1,499	385	182	46	157
2055	2,276	1,821	455	218	52	184
2060	2,723	2,185	538	264	58	216
연평 균증 가율	6.7%	7.2%	5.4%	9.1%	3.6%	4.2%

-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상 사회보험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가 향후 인구고령화, 공적연금 성숙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
 -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지출은 2013년 GDP 대비 6.3%에서 2060년 23.2%로 증가
 - －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64.6%에서 2060년 80.2% 증가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할 경우 89.9%)

〈표 2-5〉 사회보장지출 전망 (구성비 %)

연도	합계 (가+나)	사회보험 (가)	일반재정지출 등			
			소계 (나)	기초노령연금	모형구축부문	기타
2013	100.0	64.6	35.4	3.3	8.5	23.6
2020	100.0	70.4	29.6	5.0	6.6	18.0
2025	100.0	72.5	27.5	7.0	5.7	14.9
2030	100.0	74.5	25.5	8.4	4.7	12.4
2035	100.0	76.0	24.0	9.3	3.7	10.6
2040	100.0	77.6	22.4	9.6	3.1	9.7
2045	100.0	79.2	20.8	9.4	2.7	8.7
2050	100.0	79.6	20.4	9.7	2.5	8.3
2055	100.0	80.0	20.0	9.6	2.3	8.1
2060	100.0	80.2	19.8	9.7	2.1	7.9

주: 1) 사회보험 및 기초노령연금 지출전망은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결과 원용
 2) 모형구축부문은 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보육돌봄서비스, 아이돌봄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수당, 노인돌봄서비스
 3) 기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ALMP(고용보험기금사업제외), 국가보훈급여, 공공임대주택, 기타지출, 지방자체복지사업

〈표 2-6〉 사회보험지출 전망 (GDP 대비 %)

연도	사회보험지출 (GDP 대비 %)								
	합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2013	6.3	3.1	0.3	1.0	0.8	0.2	0.2	0.3	0.5
2020	9.1	4.6	0.3	1.6	1.0	0.2	0.2	0.4	0.8
2025	11.0	5.7	0.4	2.0	1.1	0.2	0.2	0.5	0.8
2030	13.3	6.9	0.5	2.5	1.3	0.2	0.3	0.6	1.0
2035	15.3	8.1	0.7	3.2	1.3	0.2	0.3	0.6	0.8
2040	17.5	9.3	0.9	4.1	1.4	0.2	0.3	0.5	0.8
2045	20.0	10.2	1.1	5.0	1.4	0.2	0.3	0.5	1.2
2050	21.2	10.9	1.2	5.8	1.4	0.2	0.3	0.4	0.9
2055	22.2	11.2	1.3	6.4	1.4	0.2	0.4	0.4	0.9
2060	23.2	11.5	1.4	7.0	1.5	0.2	0.4	0.4	0.8

〈표 2-7〉 사회보험지출 전망

연도	사회보험지출 (조원)								
	합계	건강 보험	노인 장기요양 보험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산재 보험	고용 보험
2013	84	42	4	13	11	3	2	4	6
2020	192	97	7	33	21	4	4	8	16
2025	308	161	12	56	31	5	7	13	22
2030	473	247	20	89	45	7	10	20	36
2035	662	353	30	138	59	8	13	25	36
2040	904	478	45	213	74	10	16	28	40
2045	1,214	622	64	305	86	13	20	30	75
2050	1,499	772	86	412	96	15	24	31	62
2055	1,821	920	110	523	114	19	30	34	71
2060	2,184	1,078	135	655	140	23	37	38	78

○ 사회보험을 제외한 일반재정지출 중에서도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
금이 장기적으로 일반재정지출의 절반 차지

- 일반재정지출은 2013년 GDP 대비 3.5%에서 2060년 5.7%로 증가하나,
전체 사회보장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5.4%에서 19.8%(2060
년)로 점차 감소
- 일반재정지출 중 기초노령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8.7%에서
2060년 49.1%로 증가

□ 일반재정지출(사회보험을 제외한 사회보장지출)

-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기초생활보장제도, ALMP(고용보험기금사업 제
외), 국가보훈급여, 공공임대주택 등 일반재정지출은 GDP 대비
2.9%~3.1% 수준 유지
- 보육료지원 및 양육수당 등 보육정책의 경우 저출산 등으로 인한 영유아 인
구수 감소로 인해 2020년대 후반 GDP 대비 비중이 점차 감소

〈표 2-8〉 일반재정지출 전망

연도	일반재정지출 (조원)											
	합계	기초 노령 연금	모형구축부문			기초 생활 보장 제도	ALMP	공공 임대 주택	국가 보훈 급여	EITC	기타 재정 지출	지방 자체 복지
			보육 정책	장애인 정책	노인 돌봄 서비스							
2013	46	4	10	1	0	10	5	2	3	1	7	3
2020	81	14	15	3	0	16	7	2	5	3	11	5
2025	117	30	20	4	1	22	9	2	6	4	14	7
2030	162	54	24	5	1	27	10	2	8	5	18	8
2035	209	80	27	6	1	33	12	3	9	6	22	10
2040	262	112	28	7	2	40	13	3	12	7	27	12
2045	319	145	30	8	2	47	15	3	16	9	30	14
2050	385	182	34	9	2	55	18	4	20	10	33	17
2055	455	218	39	11	3	63	20	4	27	12	39	19
2060	538	264	44	12	3	72	23	5	35	14	45	22
연평균 증가율	5.4%	9.1 %	3.3 %	5.5%	6.5%	4.3 %	3.1%	2.4 %	5.2 %	6.6%	4.2 %	4.3%

주 : 1) 기초노령연금은 「장기재정전망협의」 전망결과 원용
2) 보육정책은 보육료지원(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보육돌봄서비스, 아이돌봄지원
3)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4) 기초생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
5) ALMP 중 고용보험기금사업(2013년 기준 2.3조원)은 제외

□ OECD SOCX 정책목표별 전망결과를 살펴보면, 노령과 보건정책에 치중된 지출 구조의 특성이 장기적으로 더욱 두드러져 전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령과 보건정책에 지출이 집중되는 반면, 근로계층, 아동·여성 등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및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가족정책의 지출비중은 감소

○ 노령정책과 보건정책지출이 점차 증가하여 2060년에는 전체 사회보장지출의 85.9% (2013년 68%) 차지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 노령정책은 2013년 GDP 대비 2.3%에서 11.1%(2060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 보건정책은 2013년 4.2%에서 13.6% (2060년)로 증가
- 근로계층과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가족정책의 경우 GDP 대비 지출 비중 오히려 감소
 - 향후 저출산과 고용불안 등으로 가족정책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지출규모 감소
 -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2013년 GDP 대비 0.6%에서 0.5%(2060년), 보육료지원 등 가족정책의 경우 2013년 0.8%에서 0.6% (2060년)로 감소
 - 특히 가족정책의 경우 저출산 등으로 인한 영유아수, 아동수 등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8.6%에서 2%(2060년)로 감소
 - ALMP는 2013년 전체 지출 대비 6.6%에서 1.6%(2060년)로 감소
- 노후소득보장 등 노령정책과 함께 생산연령 계층에 대한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실업정책, 가족정책 지출확대 및 제도발전 등 지출구조 개편 필요

〈표 2-9〉 OECD SOCX 9대 정책영역별 복지지출 전망

연도	지출규모 (조원)									
	합계	①노령	②유족	③근로 무능력	④보건	⑤가족	⑥ALM P	⑦실업	⑧주거	⑨기타
2013	128	31	2	7	56	11	8	4	—	8
2020	269	71	5	14	121	17	13	12	2	13
2025	420	120	8	22	195	23	16	16	2	17
2030	629	191	13	31	294	28	20	29	3	21
2035	864	278	18	41	416	31	23	28	4	25
2040	1,156	396	26	48	561	33	26	31	4	30
2045	1,523	530	36	55	731	37	31	64	5	35
2050	1,872	679	47	63	911	42	34	50	6	40
2055	2,261	839	60	75	1,091	48	38	58	7	46
2060	2,706	1,041	73	89	1,283	54	43	64	8	52
연평 균증 가율	6.7%	7.8%	7.4%	5.6%	6.9%	3.4%	3.5%	6.2%	3.3%	4.0%

주 : 지방자체사업비(2013년 예산기준 2.4조원) 정책영역별 분류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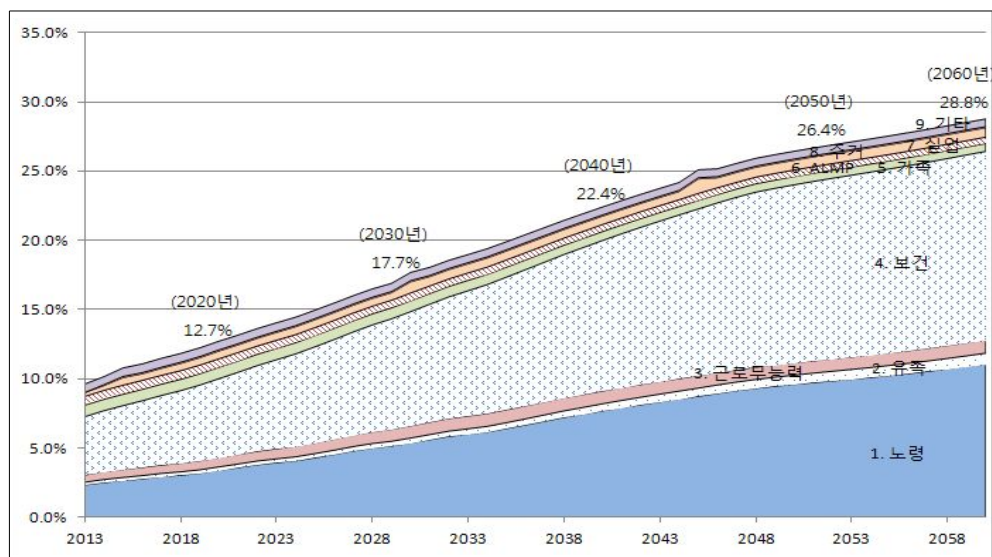
〈표 2-10〉 OECD SOCX 9대 정책영역별 복지지출 전망 (GDP 대비)

연도	GDP 대비 (%)									
	합계	①노령	②유족	③근로 무능력	④보건	⑤가족	⑥ALM P	⑦실업	⑧주거	⑨기타
2013	9.6	2.3	0.2	0.5	4.2	0.8	0.6	0.3	—	0.6
2020	12.7	3.4	0.3	0.7	5.7	0.8	0.6	0.6	0.1	0.6
2025	14.9	4.3	0.3	0.8	6.9	0.8	0.6	0.6	0.1	0.6
2030	17.7	5.4	0.4	0.9	8.3	0.8	0.6	0.8	0.1	0.6
2035	19.9	6.4	0.4	0.9	9.6	0.7	0.5	0.6	0.1	0.6
2040	22.4	7.7	0.5	0.9	10.9	0.6	0.5	0.6	0.1	0.6
2045	25.1	8.7	0.6	0.9	12.0	0.6	0.5	1.1	0.1	0.6
2050	26.4	9.6	0.7	0.9	12.9	0.6	0.5	0.7	0.1	0.6
2055	27.6	10.2	0.7	0.9	13.3	0.6	0.5	0.7	0.1	0.6
2060	28.8	11.1	0.8	0.9	13.6	0.6	0.5	0.7	0.1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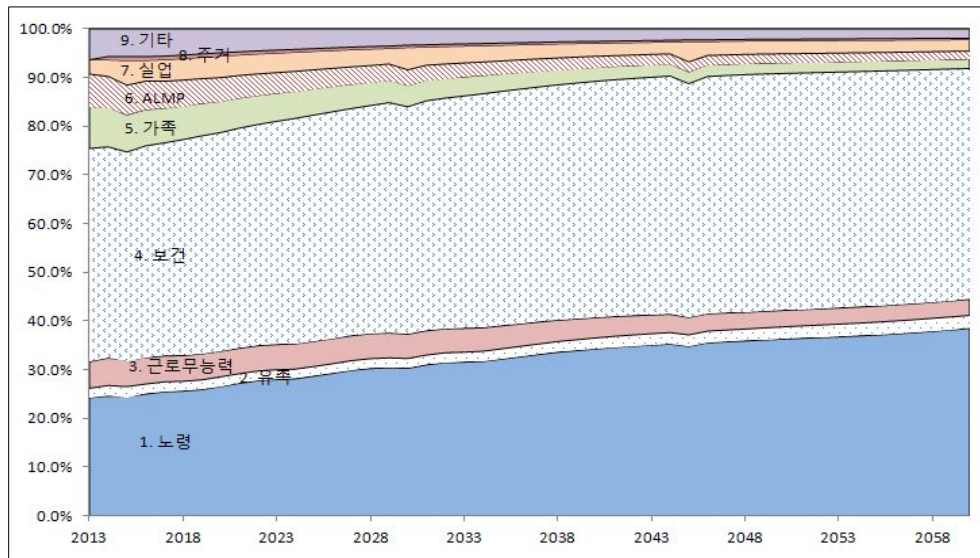
〈표 2-11〉 OECD SOCX 9대 정책영역별 복지지출 전망 (구성비 %)

연도	구성비									
	합계	①노령	②유족	③근로 무능력	④보건	⑤가족	⑥AL MP	⑦실업	⑧주거	⑨기타
2013	100.0	24.2	1.9	5.5	43.8	8.6	6.6	3.0	—	6.4
2020	100.0	26.5	2.0	5.3	44.9	6.4	4.8	4.4	0.7	4.9
2025	100.0	28.7	2.0	5.2	46.5	5.4	3.9	3.8	0.6	4.1
2030	100.0	30.3	2.0	5.0	46.7	4.4	3.2	4.6	0.5	3.4
2035	100.0	32.2	2.1	4.7	48.1	3.6	2.6	3.2	0.4	2.9
2040	100.0	34.3	2.3	4.2	48.5	2.9	2.3	2.7	0.4	2.6
2045	100.0	34.8	2.4	3.6	48.0	2.4	2.0	4.2	0.3	2.3
2050	100.0	36.3	2.5	3.4	48.7	2.2	1.8	2.7	0.3	2.1
2055	100.0	37.1	2.7	3.3	48.2	2.1	1.7	2.5	0.3	2.0
2060	100.0	38.5	2.7	3.3	47.4	2.0	1.6	2.4	0.3	1.9

[그림 2-2] OECD SOCX 9대 정책영역별 복지지출 전망 (GDP 대비)



[그림 2-3] OECD SOCX 9대 정책영역별 복지지출 전망 (구성비)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상 등 제도유형별 복지지출 전망

- (사회보험) 전체 복지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회보험지출은 공적연금 제도 성숙 및 인구고령화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부조제도에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지출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공공부조 지출규모 증가(2013년 GDP 대비 1.2%→2060년 GDP 대비 3.8%)
- (사회보상, 사회서비스)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2060년 GDP 대비 비중은 현행수준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표 2-12〉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제도유형별 복지지출 전망

구분	지출규모 (조원)					GDP 대비				
	합계	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합계	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2013	130	84	16	27	4	9.8	6.3	1.2	2.0	0.3
2020	273	192	35	40	5	12.9	9.1	1.7	1.9	0.2
2025	425	308	59	52	7	15.1	11.0	2.1	1.8	0.2
2030	636	473	91	63	8	17.9	13.3	2.6	1.8	0.2
2035	872	662	126	74	10	20.1	15.3	2.9	1.7	0.2
2040	1,165	904	166	83	13	22.6	17.5	3.2	1.6	0.3
2045	1,534	1,214	208	94	17	25.3	20.0	3.4	1.6	0.3
2050	1,885	1,499	256	108	21	26.6	21.2	3.6	1.5	0.3
2055	2,276	1,821	303	124	28	27.7	22.2	3.7	1.5	0.3
2060	2,723	2,185	361	140	37	29.0	23.2	3.8	1.5	0.4
연평균 증가율	6.7%	7.2%	6.9%	3.6%	5.1%					

주: 1)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2) 공공부조는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자활지원, 장애인연금, EITC 근로장려금 등

3) 사회보상은 보훈급여, 사할린 한인지원, 새터민 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 의사상자예우, 긴급복지

4)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아동·장애인 및 여성 등에 대한 서비스로 구성

자료: 신화연 외(2013)

□ 현금 및 현물급여별 복지지출 전망

○ 2013년 기준 전체 복지지출 중 51.7%인 63조원은 건강보험 등 현물급여로, 나머지 59조원은 공적연금 등 현금급여로 지출

－ 공적연금지출 증가 등 현금급여 지출이 2013년 GDP 대비 4.4%에서 2060년 14.4%로 크게 상승

－ 현물급여의 경우 지출규모는 점차 상승하나, GDP 대비 규모는 2050년 14.1%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

〈표 2-13〉 현금 및 현물급여별 복지지출 전망

구분	지출규모 (조원)			GDP 대비 (%)		
	합계	현금급여	현물급여	합계	현금급여	현물급여
2013	122	59	63	9.2	4.4	4.7
2020	260	129	132	12.3	6.1	6.2
2025	409	200	209	14.5	7.1	7.4
2030	616	305	311	17.3	8.6	8.7
2035	849	413	436	19.6	9.5	10.0
2040	1,139	555	585	22.1	10.7	11.3
2045	1,503	744	758	24.8	12.3	12.5
2050	1,851	909	942	26.1	12.8	13.3
2055	2,237	1,110	1,127	27.3	13.5	13.7
2060	2,680	1,356	1,324	28.5	14.4	14.1
연평균 증가율	6.5%	7.1%	5.9%			

주: 1) 현금급여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보훈급여,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양육수당 등

2) 현물급여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

3) ALMP(2013년 기준 8조원)의 경우 현금과 현물급여로 구분할 수 없어 현금 및 현물급여 분류시 제외하였으므로 전체 사회보장지출 규모와는 차이가 있음.

제2절 사회보장 재정추계 현황과 한계

□ 재정추계기간 및 시행 주기

- (추계기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추계기간을 고려하여 2060년까지 추계(향후 47년 전망)
- (추계주기)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격년으로 시행
-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추계기간을 고려하여 2060년까지 추계하고 있는데, 추계결과 및 제도개선에 대한 심층분석 및 평가 필요
 - 향후 10년(중기) 및 장기추계로 구분할 필요성 검토
- 재정추계 시행주기는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격년으로 하되, 협의회 5년주기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장기재정추계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요국 사례 검토 필요
 - 재정추계의 목적에 따라 추계기간, 방법론, 전망결과 활용방안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사례 연구 필요

□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가정

- 경제변수 가정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재정추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공통전제는 협의회 가정을 원용하였음.
 - 차기 재정추계에 대비하여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시행주기(5년 마다)와 장기 재정전망협의회 가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사전 조율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장기재정추계시 반영하는 현행 제도 기준

- (추계시 반영 제도) 2013년 현행 제도 및 정책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망전제(가정)에 대한 개념 및 범주
 - 단, 2014년 시행 또는 예산반영이 확정된 주요제도의 경우 추계범주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반영
- 2013년 재정추계 이후 제도 도입 및 개선 내용 반영
 - 기초연금 도입, 장애인 등급개편에 따른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현재 논의 중인 제도개선을 반영한 장기재정추계 방법론 모색 필요

□ 사회보험과 일반재정지출 장기재정추계 방법론

- (사회보험 및 기초(노령)연금) 8개 사회보험은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결과를 원용하되, 모형 및 방법론 공유
- (일반재정지출)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일반재정지출 재정추계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차원에서 모형 구축 및 기초율 검토
- 사회보험의 경우 방법론은 공유하였으나 모형 및 기초율 설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논의 및 분석을 위해 장기재정전망협의회와 별도의 모형 구축의 필요성 검토

□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제시 및 활용방안 모색

- 2013년 재정추계에서는 사회보험과 일반재정지출로 구분하여 지출 전망 결과 제시
- 사회보험의 경우 각각의 제도별로 구분하여 재정추계결과를 분석 및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해 의무지출, 재량지출 등 지출전망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전망결과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방향 논의 등 재정추계결과 활용방안 모색
- 미래 사회보장 지출 수준과 증가패턴 등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위해 인구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 해외주요국과 비교 분석 필요
- 2013년 재정추계에서는 기본 시나리오에 의한 전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인구·경제변수, 주요 정책변수 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필요
- 2015년 차기 재정추계 시행 이후 2013년과 2015년 재정추계를 방법론, 분석을 위한 가정, 전망결과 등 2013년과 2015년 재정추계 비교 분석 필요

□ 사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 (재정의 지속가능성) 2013년 재정추계에서는 사회보장지출만 전망하고 수입 및 국민부담수준 등은 향후 검토하기로 함.
- 사회보장재정추계 시행계획 수립시 중장기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국민부담수준 분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점검 필요
 - 향후 증가할 복지지출에 대비한 국민부담수준 분석을 위해 GDP 대비 조세 수입(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수준(사회보장부담률) 분석
- 조세부담률 및 국가재정목표 등 전망의 한계

- 조세부담률은 국가재정수지와 국가 채무 등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장기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정부의 조세부담률 전망결과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미래에 지향해야 할 사회보장수준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출과 부담간 균형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검토
 - 현재와 미래의 사회보장지출 수준, 구성, 증가패턴 등을 토대로 한 제도개선방향 논의
 - 사회보장지출 전망과 함께 (재원별) 부담수준 등 재정적 지속가능성 점검을 위한 분석 필요
 -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를 토대로 인구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으로 인한 지출증가와 이에 따른 재원마련방안과 재정부담에 대한 수용가능성 등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검토
-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회보장지출에 대비한 부담수준 분석 등 재원마련방안 모색
- 지출증가에 따른 부담수준 등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인상 등 사회보험 제도개선²⁾, 국가재정수지와 국가부채 등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반영³⁾

2) 사회보장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험의 경우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 재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2060년 국민연금 보험료 21.4%(2013년 9%), 건강보험은 15.4%(2013년 5.89%) 인상 필요

3) 분석을 위해 사회보험료와 조세부담률을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조세수입 등 일반재정 수입을 경제성장과 동일하게 증가한다는 가정하에서 사회보장지출 증가에 따른 추가부담수준을 추정한다면, 2060년까지 재정추계기간 사회보장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6.7%(사회보험지출의 경우 7.2%)로 경제성장 연평균 증가(4.3%)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2016년 재정수지 적자발생, 향후 적자폭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제 3 장

재정추계 발전방향(안) 모색

제1절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지출범주 설정

제2절 사회보험 재정추계

제3절 재정추계 발전방향(안) 모색

3

재정추계 발전방향(안) 모색 <

<

제1절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지출범주 설정

가. OECD SOCX 기준

- (정의) OECD SOCX은 “복지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치는 환경에 처한 개인과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기관이 급여를 제공하거나 재정적인 기여에 따른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
- 급여와 재정적인 기여의 제공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직접적 지급이나 개별적인 접촉이나 이전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포함하지 않음
 -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만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가구간 이전은 포함하지 않음
- (급여의 범주) 사회복지지출은 3가지 형태의 사회적 급여 포함
 - 3가지 형태의 사회적 급여를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세지출은 현금급여의 형태를 띠다고 할 수 있으므로 OECD 홈페이지에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
 - 현금급여(cash benefit) : 연금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사회부조(공공부조) 급여 등
 - 현물급여(in kind benefit) : 보육서비스,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 조세수단(TBSP) : 유자녀 가족에 대한 조세지출, 민간의료보험 각출금에 대한 조세감면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세수단

- (급여의 조건) 급여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져야 하고, 급여의 제공을 규정하는 프로그램은 개인간 재분배 혹은 의무적인 참여와 관련되어야 함

* 유사한 어려움이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인 환경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환경에서 야기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여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는 것

- 즉 수급권은 개인별 직접적인 시장 매매의 결과가 아니고, 그들의 개별적인 위험 프로파일에 따른 것으로서,
- 사회서비스의 공급, 사회보험과 사회부조프로그램은 실제로 가구간 재분배와 관련이 있고, 일반조세 혹은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고 인구집단간 혹은 인구집단내 자원을 재분배해야 함

- (행정비용) 일반적으로 행정비용은 제외

- 급여제공시 전달체계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즉 행정비용*은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하지 않음

* 수급자 등록, 급여행정, 기여금 징수비용, 통제, 조사, 평가 등

- 그러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LMP), 아동보육서비스, 보건에 대한 공공지출과 같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행정비용은 포함함

· 고용센터의 직원은 구직자에게 응대 및 카운슬링을 직접 제공하고 보육교사는 아동에게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응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와 분리할 수 없음

* 데이터 원자료는 독립적인 개념과 정의를 가지는 OECD Labor Market Policy database, OECD Education database, OECD Health Data 에서 추출

- (자본투자) 건설비용과 같은 자본투자는 자연증가에 기초하여 포함
 - 예를 들어 장기요양기관 또는 병원을 건설하는데 4년간 100만달러(이자포함) 지출되었다고 할 때 25만달러를 4년간 자본 투자 지출로 포함
- (이자비용) 일반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는 대출금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자지원을 받았다면 차감된 이자는 사회복지지출에 포함(2011년 신규 기준)
 - 용자지출은 제외하되, 이차보전은 포함
 - * 예) 주택부문 용자(분양주택용자,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공공임대주택 지원용자 등) 15.8조원(주택 부문 예산의 91%), 공적연금 부문 용자(생활안정자금용자 등 3.1조원), 저소득층생업자금용자(72억원) 등
 -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개입은 동시적인 상호간 배열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자가 교환적으로 등가의 가치에 대한 어떤 것을 동시적으로 제공할 책무를 가지는 개입은 사회보장의 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하나,
 - 대출이 무이자거나 사회보장의 목적으로 현재의 시장 비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한다면, 지원된 이자 혹은 차감된 이자는 사회적 급여에 포함될 수 있음(Eurostat, 2008)을 개정판(2011년)에서 제시하고 있음
- 행정비용의 포함 기준(안)
 - 인건비, 운영비 등 급여 제공을 위한 간접비용은 SOCX 작성지침을 재해석(OECD 매뉴얼 90조 및 91조)하여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기준으로 행정비용의 포함여부를 결정
 - < SOCX Manual >
 - (90조) SOCX는 일반적으로 행정비용(사회지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간접비 : 수급자등록, 급여행정, 기여금 징수, 통제, 조사, 평가 등)을 배제
 - (91조) 다만 ALMP, 아동보육서비스, 보건에 대한 공공지출과 같은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행정비용이 합계에 포함

- 현물급여 제공에 관련된 인건비, 운영비 등의 행정비용은 사회복지지출 범주로 포함하되, 현금급여와 관련한 행정비용은 미포함

(예) ‘기초연금 제도운영’, ‘기초연금지원센터 운영’ 등 현금급여 지급과 관련된 행정비용은 복지지출에서 제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 등 현물급여와 관련된 행정비용은 포함

- 현물급여와 관련된 인식개선 및 교육, 행사지원 등 비용은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에 포함

(예) ‘어린이 주간행사지원’, ‘아동여성인권관련 통합교육’, ‘양성평등문화 확산’,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관리 및 교육’ 등

- (ODA 등) 국제기구 분담금, 국제개발협력 등은 제외

- (예) ‘유엔여성통합기구 기여금(ODA)’, ‘스카우트연맹 연차회비지원’ 등

- (R&D)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에서 제외 : Willem Adema(OECD SOCX 담당자)를 통해 확인

나. OECD SOCX를 적용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의 범주

-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사회보장지출 범주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OECD 사회복지지출(SOCX) 중 공공부분에 대해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기타 등 9대 정책영역별로 사회보장제도 분류

- OECD SOCX 작성지침은 확고한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 2013년 예산기준으로 세부사업들을 OECD SOCX 정책영역별로 분류 시, 근본적인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포함여부를 결정함.

○ OECD SCOX 개념

- OECD SOCX는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을 “복지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치는 환경에 처한 개인과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기관이 급여를 제공하거나 재정적인 기여에 따른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함.
 - 급여와 재정적인 기여의 제공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직접적 지급이나 개별적인 접촉이나 이전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포함하지 않음.
 -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만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가구간 이전은 포함하지 않음.
 - 급여의 조건으로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져야 하고, 다른 하나는 급여의 제공을 규정하는 프로그램은 개인간 재분배 혹은 의무적인 참여와 관련되어야 함.
 - 급여를 제공할 때 전달체계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은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비용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하지 않음.
 - 그러나 서비스 제공과 분리할 수 없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아동보육서비스, 보건의 경우 행정비용이 합계에 포함됨.
 - 이들 데이터의 원자료는 각각 OECD Labor Market Policy database, OECD Education database, OECD Health database의 독립적인 개념과 정의에 의해서 추출됨.
 - 건설비용과 같은 자본투자는 자연증가에 기초하여(accruals basis) 포함함.
- ; 예를 들어 장기요양기관(혹은 병원)을 건설하는데 4년간 100만달러(이자를 포함하여)가 지출되었다고 할 때 25만달러를 4년간 자본 투자 지출로 포함해야 함.

□ 9대 정책영역별 분류 기준

- 노령정책영역은 노령연금에 관한 모든 현금 지출(일시금 포함)로 구성됨.
 - 노령현금급여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을 제공하거나 ‘법정’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거나 노령연금 기여의 필수요건을 완수한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임.
 - 부양자가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지불되는 부양자에 대한 보조금도 포함되며, 또한 조기은퇴연금을 포함함.
 - 돌봄서비스,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 다른 현물 급여 등 노인서비스에 관한 지출 및 기관에서 시설보호(예. 노인 그룹홈 운영비 등)에 이용되는 지출 등도 포함함.
- 유족정책영역은 배우자나 부양자가 사망한 사람들에게 공적영역에서 급여(현금 혹은 현물)를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
 - 현금급여에는 유족급여 수급자의 수당과 부양자에 대한 보조금과 기타 현금급여가 해당하고, 현물급여에는 장제비와 기타 현물급여가 있음.
- 근로무능력정책영역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다 장애로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근로무능력을 가질 때 지급하는 급여로 구성
 - 유급질병휴가, 특별 수당과 연금과 같은 장애 관련 지급금 등 산업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지출, 질환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로무능력으로 야기된 소득의 상실과 관련한 현금급여 등 포함
 - 부양 아동의 질병이나 부상과 관련하여 지급된 급여는 가족영역으로 의학적인 보호에 대한 공적인 지급금은 보건영역으로 분류되고 근로무능력 급여에서는 제외
 - 또한 돌봄서비스와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 다른 현물 급여 등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지출을 근로무능력정책에 포함
- 보건정책영역에서 사회지출통계는 OECD Health Database 이용
 - 보건지출은 개인의료서비스와 집합보건의료서비스, 투자 등으로 구분

- 입원환자요양서비스, 보조의료서비스 및 약품에 관한 지출이 포함되고, 공공기관의 용자 상황은 미포함
- 가족정책영역에는 가족을 지원하는 지출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과 다른 부양자의 지원과 관련된 비용 포함
 - 현금급여에는 가족수당과 산전후와 육아휴직 관련 지출, 기타 현금급여들이 포함되고. 현물급여에는 돌봄서비스와 가사보조서비스, 기타 현물급여 포함
 -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 대한 지원에서 국제 비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취학아동에 대한 지출은 배제
-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은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를 찾는 수급자의 가능성의 개선이나 그들의 소득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모든 사회지출(교육 이외) 포함
 -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공공 고용서비스와 행정, 노동시장 훈련, 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환하는 청년에 대한 특별한 정책, 실업자와 기타 사람들(청소년과 장애인 제외)의 고용을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지출 포함
- 실업정책영역은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 지출 포함
 - 기업의 도산 및 감축으로 인해 해고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정리해고수당 및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실직이나 노동시장정책 때문에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공적 자원 포함
- 주거정책영역은 임대료 또는 주거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포함
 - 임대주택에 배정된 사람들에 대해 주거비용 보조로 ‘꼬리표를 붙인’ 직접적인 공공 보조 포함

- 기타 사회정책(Other social policy areas)은 다양한 이유로 관련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제공되거나 다른 급여들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제공되는 지출과 다른 항목에서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지출 포함
 - 이민자와 탈북자, 토착민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이 이에 해당함.

□ OECD SOCX 적용 기준

- OECD SOCX 작성지침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 행정비용 등 범주 구분시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경우 급여의 양 또는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포함여부를 결정함.
 - 현금급여와 관련한 사업운영비, 인건비 등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행정비용은 급여자체의 양과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음.
 - 교육, 홍보, 행사 및 인식개선 등의 비용과 ODA, 국제기구 분담금, 국제개발협력, R&D(연구개발) 비용 등 급여전달체계 비용 외의 행정비용은 공공 사회복지지출 범주에서 제외함.
- 행정비용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급여의 양 또는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기준으로 현금급여의 전달에서 발생하는 자본축적은 포함하지 않고, 현물급여의 경우에는 포함함.
 - 연구개발비의 경우 급여의 양 또는 질을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모두에서 포함하지 않음.
 - 일회성행사는 급여의 양을 늘리거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금 및 현물급여 모두에서 포함하지 않음.
- 정부예산을 기준으로 OECD SOCX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 설정 및 9대 정책영역별로 분류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ALMP 사업목록은 원용하고, 재정지출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부담을 포함하여 추계

- (OECD SOCX 작성기준) 결산자료를 토대로 OECD에 격년마다 제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작성기준 검토
 - 보건정책, ALMP, 교육예산 등 타 DB를 원용함에 있어 SOCX 정책영역간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OECD 제출 전 정책영역간 조정 필요
 - * 정책영역간 중복 대부분은 ALMP로, ALMP 제출 전 SOCX와 사전 조율 후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
 - SOCX 작성기준이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SOCX 기준에 따른 것과 작성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부분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분류할 필요가 있음.
 - * 작성기준에 직접적인 지침은 없어 일부 모호한 부분을 정리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화하여 주기별로 업데이트 등 관리 필요
 -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특성상 용자 비중이 높는데, 목시적 보조금에 대한 SOCX 작성기준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누락되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전망을 위한 지출범주 설정) OECD에 제출하는 SOCX 작성기준과 별도로 장기 재정전망을 위한 지출범주 설정
 - 주택정책 등 우리나라 제도의 특성을 장기전망에 반영할 수 있도록 OECD 작성기준을 보완한 별도의 작성기준 필요성 제기
 - 장기전망에 있어 총지출 뿐 아니라 순지출에 따른 추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 순지출은 민간지출과 조세감면 등을 추정해야 하므로 장기전망에서는 다소 난해한 측면이 있어, 장기재정에서는 공공지출로 한정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이를 위한 방법론 연구 고려
- (국민의료비 추정) 국민보건계정 구조와 구축과정을 통해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공공의료비 지출범주 검토
 - 201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매뉴얼에 따라 자본형성이 제외되게 되는데, 국민의료비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 국민의료비 중 SOCX 공공지출에 원용되는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은 통상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 개념과는 차이⁴⁾가 있으므로 구분 필요

〈표 3-1〉 OECD SOCX 공공지출 기준을 적용한 사회보장지출 분류

9대 정책영역	주요 내용
1. 노령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노령연금 등 급여(조기은퇴포함) ·돌봄·재활·일자리 등 노인서비스 관련 지출 예) 국민연금(노령연금반환일시금), 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연금(퇴직급여퇴직수당), 군인연금(퇴역연금 퇴직일시금퇴직수당),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단체지원, 장사시설 설치, 노인보호 전문기관, 취약 계층 의료지원 등
2. 유족	·배우자나 부양자가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유족연금 등 급여 예) 국민연금(유족연금사망일시금), 별정우체국연금(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사망조위금), 군인연금(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급여-기타급여사망조위금), 보훈급여(수시보상금기타수당) 등
3. 근로 무능력 관련급여	·장애로 노동시장에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을 가질때 지급하는 급여 예) 국민연금(장애연금장애일시금), 공무원사학연금(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상이연금), 산재보험(휴업·장해간병·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저소득장애인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 선택적복지,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 지원, 장애아교육지원, 보훈급여(상이군경) 등
4. 보건	·의료비 및 보건의료관련 시설투자 등 공공보건지출 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요양급여), 집합보건의료, 의료고정자본 형성, 취약계층지원(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개선) 등
5. 가족	·자녀양육 및 기타 부양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및 가족관련 서비스 급여 예) 보육누리과정아이돌봄 등 영유아 지원, 취약계층농어촌 교육복지지원, 입양실종방과후활동성보호·폭력및가출예방 등 아동·청소년 지원, 한부모·다문화저소득가정 등 가족지원, 여성폭력 등 여성지원 등
6. ALMP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수급자의 고용상황 개선이나 소득능력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지출 예)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접일자리사업, 직업훈련사업, 고용서비스사업, 고용장려금사업, 창업지원사업,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사업 등
7. 실업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에 대한 소득보상과 해고수당 등 관련 급여

4)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국민의료비 대비)은 54%, 건강보험관련 비급여 대비 건강보험 지출인 건강보험 보장률 62%

9대 정책영역	주요 내용
	예) 고용보험(실업급여)
8. 주거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체계 주거급여
9. 기타	·다양한 이유로 관련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제공되거나 다른 급여들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제공되는 지출 예) 기초생활급여, 긴급복지,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지원, EITC 근로장려금, 군인별정우체국연금(재해보조금), 사할린 한인지원, 임대주택지원,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 사유재산피해복구지원, 문화바우처 지원 등

제2절 사회보험 재정추계

□ 사회보험 재정추계

○ 사회보험과 기초(노령)연금은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결과를 원용하되, 재정추계모형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발표 및 검토한 바 있음.

－ 2013년에는 8개 사회보험 및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위원회에서 모두 검토하였으나 2015년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기초연금은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음.

○ 사회보험과 기초(노령)연금 등에 대한 전망방법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 각 제도별로 추계담당기관에 전달했으나, 이후 피드백 등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발생

○ 그간 2차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시행한 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추계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함

－ 재정추계 주체간 재정추계 주기*와 지출추계 범주, 목적 등이 서로 상이한데, 재정추계 결과의 정합성을 위해 사회보험의 경우 소관 기관별로 추계결과 원용

*추계 주기: 사회보장재정추계 2년(2013년 부터), 장기재정전망 5년(2015년 최초 시행), 국민연금 5년(2018년 예정)

－ 사회보험 제도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별 분석 등이

제외되고, 사회보험료와 재정수입 등 수입을 배제한 총 지출 규모만 추계하는데 기인함

□ 특수직역연금 재정추계

- (특수직역연금 재정추계 주기 등) 제도별로 별도로 운영하는 재정추계 주기(5년)와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2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군인연금은 2017년, 사학연금 재정추계결과는 2016년 발표할 예정이므로 소위원회에서 이를 반영할 것인지,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결과를 원용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 공무원연금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국회 특위에서 재정추계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면 소위원회에서 검토 및 논의할 예정
- (특수직역연금 재정부담 등 법조문 정비) 비용부담원칙, 연금채무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법조문이 모호하고 서로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법조문 정비 필요
- (특수직역연금 공통적용변수) 특수직역연금의 보수상승률은 민간부문의 임금 상승률과 별도로 적용, 인구감소요인은 각각의 제도별로 반영하는 등 장기재정전망에 있어 정책변수간 통일성 있는 기준 적용 필요
- (군인연금 운영인원수 가정) 2019년까지 중기계획을 반영하고 이후에는 인원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에 대해 연금가입자수 전망에 있어 다소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음.
 - 향후 인구수 감소, 무기현대화 등을 운영인원수 감소 요인 반영에 대한 검토 필요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 2013년 사회보장재정추계에서는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결과 원용하였으나, 2015년 재정추계에서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주기를 근거로 2013년 결과를

그대로 원용

- 2013년에 비해 2015년에는 거시경제변수가 저성장으로 전망되었으나, 이를 적용한 국민연금 전망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채 2013년 전망결과 원용하여 지출 과대추정의 우려 발생
-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의 경우 차등지급하는 부분으로 인해 기초연금 지출추계 담당기관에서 국민연금 재정전망결과와 일부 연계된다는 것을 근거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2013년 경제변수 전망치를 반영한 전망결과 제공하였음.

□ 본 절에서는 사회보험 중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여 이견을 제시한 바 있었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에 대해 살펴보고 검토 의견을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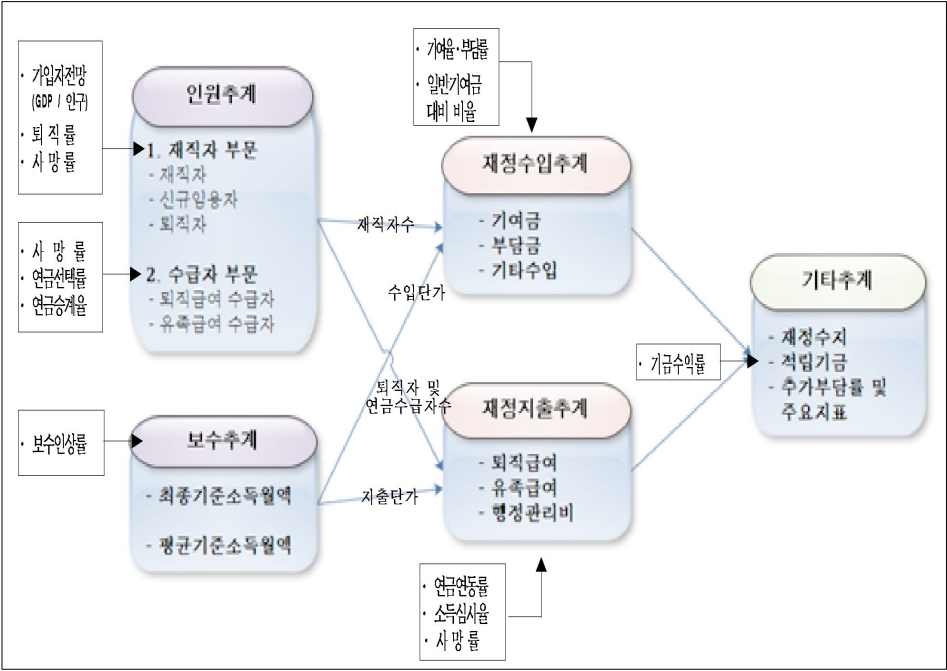
가. 공무원연금⁵⁾

□ 재정추계모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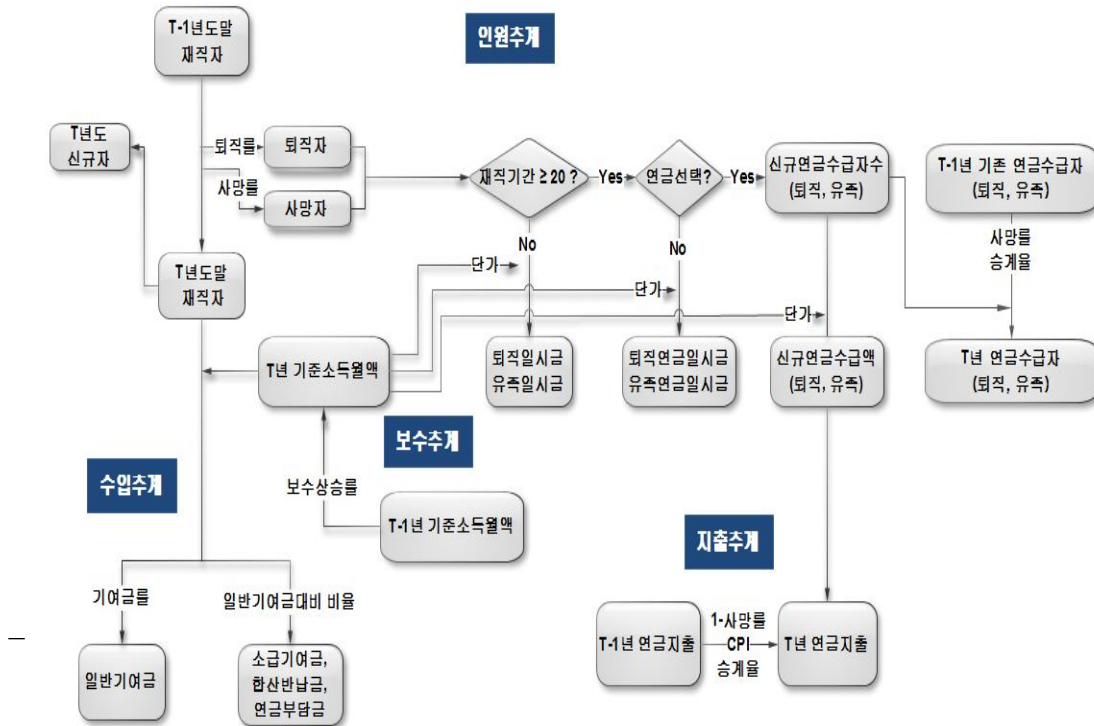
- 인원추계, 보수추계, 수입추계, 지출추계, 기타추계 등 5부문으로 구성
- 수리적으로 안정된 모형으로서 재직공무원과 연금수급자 분포를 입직시기별(96년이전, 96~09년, 10년이후), 직종별(교육직과 비교육직), 연령별(18~100세), 재직기간별(0~45년)로 세분화하여 이들 분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5) 2013년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 제5차 회의자료(2013.7.25)를 참조하여 2015년 개정법을 반영한 재정추계 중심으로 정리

[그림 3-1]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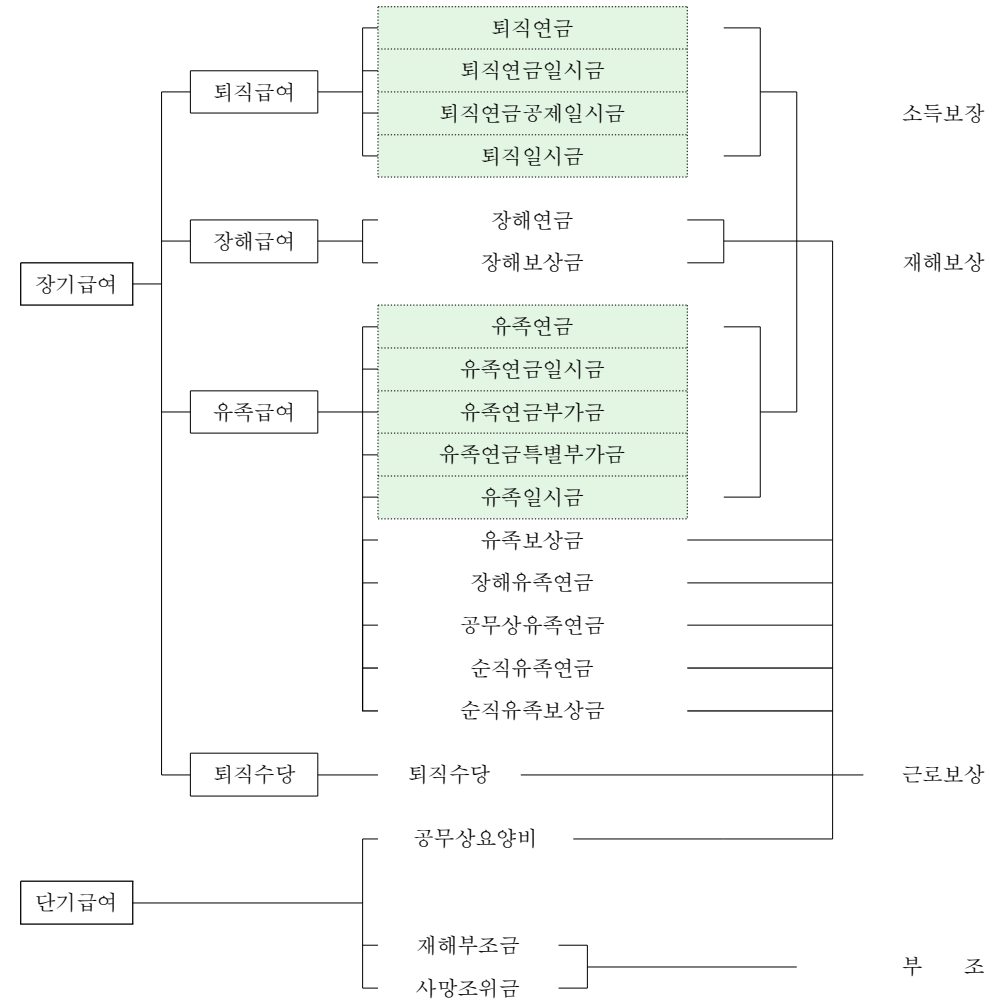


[그림 3-2]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흐름도⁶⁾



6)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모형은 연금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형에 구현하여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며, 인원 및 경제기초율 등은 모형외부에서 입력(외생변수)하는 연금수리모형임. 또한 확정적(deterministic) 재정추계방법을 적용하므로 추계 기초율이 구간추정값이 아닌 단일 수치로 설정하고, 또한 특정 수치(단일값)로 결과가 도출되므로 결과해석이 용이함. 다만 장기간의 미래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의 정보는 제공해 주지 못함.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해외공적연금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확률적 재정추계 결과를 시험적으로 제시하고 있음(미국 OASDI, 캐나다 CPP 등). 확률적(stochastic) 재정추계란 변수들의 확률분포를 고려하여 난수(random number)를 발생시켜 재정추계를 반복수행(보통 10,000회 이상)하는 방법이며, 재정추계 결과 값의 가능 범위와 실현가능성을 함께 파악할 수가 있음(이상 『국민연금의 확률적 재정추계 방법 연구(2009; 신경혜·이재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참조). 공무원연금에 대한 확률적 재정추계 적용 사례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확률적 고찰(2009 ; 김주유·송성주, 한국통계학회논문집)』을 참조하기 바람.

〈표 3-2〉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시 고려하는 급여종류



 : 장기재정전망 대상 급여

□ 인원수 추계 : 재직자와 수급자수

○ 재직자수 전망

- 총재직자 규모는 최근 실적을 초기치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행정 수요를 감안, 공무원수가 최대가 되는 해부터 향후 공무원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우리나라 전체인구, 경제수준(GDP), 고령화 정도에 따른 공무원 수요를 감안하여 공무원수 전망
- 전년도말 재직자에 사망률과 퇴직률을 적용하여 사망 및 퇴직자수를 전망하고, 이후 금년도말 재직자전망치에 전년도말 재직자를 차감한 뒤 당해연도 퇴직자를 합산하여 신규임용자 산출
- 사망률은 기존에는 공무원 고유 사망률을 산출하였으나, 2015.3 국회 「재정추계 검증분과위원회」에서 사망률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공무원생명표가 아닌 국민생명표를 공무원연금 재정추계에 적용하기로 합의
- 퇴직률은 연도별·성별·연령별·재직기간별·직종별 퇴직률 적용

○ 수급자수 전망

- 퇴직률과 사망률을 근간으로 일반퇴직과 사망(퇴직)으로 구분
- 재직기간 20년 이상 및 연금선택여부에 따라서 각각 일시금수급자와 신규 퇴직연금수급자로 구분
 - 신규연금수급자는 퇴직자에 사망률, 연금선택률 및 지급개시연령 요건을 적용하여 산출
 - 기존연금수급자는 전년도 총연금수급자에 사망률을 적용하여 산출
- 사망퇴직자에서 재직기간 20년이상 및 연금선택여부 등을 적용하여 일시금수급자와 신규 유족연금수급자 전망
- 신규 및 승계 유족연금수급의 경우 연령 재조정을 가정하여 전망
(예: 남자 연금수급자 사망(g연령) → 부인(여성) 연금수급자 승계(g-3연령))
- 기존 유족연금수급자는 전년도 유족연금 수급자수에 사망률 및 승계율을 적용하여 산출

○ 보험료 부과대상소득 전망

- 전년도 기준소득연액 분포(연도별·연령별·재직기간별·성별)에 연도별 명목 보수상승률에 의하여 전망

□ 수입 추계

- 수입은 일반기여금, 연금부담금, 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 등으로 구분
 - 재직자수와 기준소득월액에 기여율을 적용하여 일반기여금 산출
 - 연금부담금, 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 경우 일반기여금 대비 최근 실적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지출 추계

- 지출추계는 연금지출부문과 관리비지출부문으로 구성
 - 신규급여의 경우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연금과 일시금 등 다양한 종류의 급여를 수급자추계에 얻어진 항목별 수급자수에 항목별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신규 연금지출을 전망
 - 연금지출은 전년도 연령별·성별 연금지출액에 사망률과 물가인상률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연금지출액 추계

□ 주요가정

- 경제변수: GDP 성장률, 물가 상승률, 기금투자수익률
 - 기재부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14~'60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에서 정한 거시경제변수 적용('14. 12월, 국가재정법 제5조)

〈표 3-3〉 거시경제변수 전망결과(2014년말 전망)

(단위 : %)

구 분	실질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기금투자수익률
2014	3.3	1.3	3.34
2015	3.6	1.3	4.51
2016	3.8	2.5	5.06
2017	3.8	2.5	5.06
2018	3.7	2.5	5.05
2019	3.5	2.5	5.09
2020	3.3	2.6	5.11
2025	2.7	2.7	5.08
2030	2.2	2.4	4.65
2035	1.9	2.1	4.28
2040	1.6	2.0	4.09
2045	1.4	2.0	4.05
2050	1.3	2.0	4.04
2055	1.1	2.0	4.05
2060	0.9	2.0	4.06

- GDP : 공무원 가입자전망시 활용
- 물가상승률 : 공무원연금액 인상률로 활용
- 기금투자수익률 : 기재부 ‘거시전망전제’ 중 ‘명목금리’의 1.1배

(2013 국민연금 재정계산시 적용방법과 동일)

○ 공무원 보수인상률

- 기재부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의 공통 보수인상률 적용 결정('14.12月)
- 단기적으로 공무원의 낮은 보수인상률 현실을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임금 상승률에 수렴되도록 설정
 - 단기('14~'18)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공무원 보수인상률 전망
 - 중기('19~'40) : 민간 임금인상률에 수렴하도록 4단계에 걸쳐 조정
 - 장기('41~'80) : 경제 변수간 관계를 감안하여 '41년을 기점으로 선진국과 유사하게 민간 임금인상률 동일 가정

* 일반적으로 자본집약적 경제로 전환되어, 임금 인상률에 비해 금리가 더 높은 것이 특징(한국 경제 장기전망에서 유사형태로의 전환시기가 '41년임)

〈표 3-4〉 특수직역연금 재정전망을 위한 임금상승률

(단위 : %)

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민간 임금인상률
2015	3.80	3.60
2016	3.00	4.19
2017	3.00	4.28
2018	3.00	4.38
2019	3.10	4.51
2020	3.10	4.64
2025	3.20	5.10
2030	3.30	4.63
2035	3.40	4.19
2040	3.50	3.73
2041	3.60	3.60
2045	3.45	3.45
2050	3.27	3.27
2055	3.25	3.25
2060	3.16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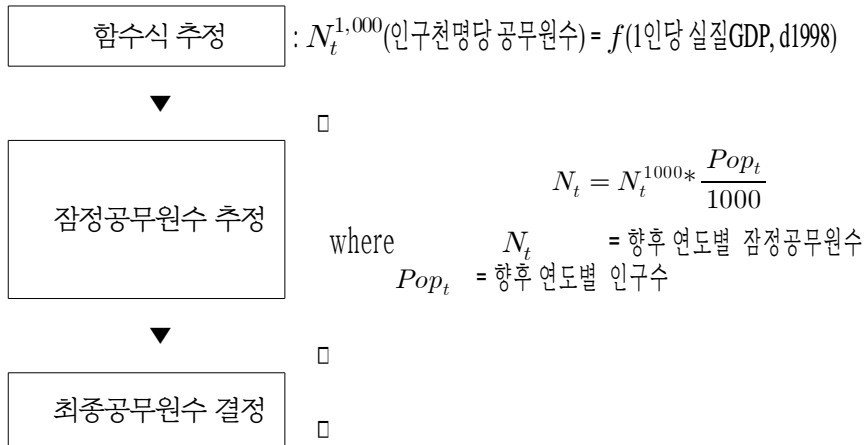
○ 공무원수 전망

- 인력예측방법으로 시계열예측(Time series Analysis), 정성적(定性的) 예측, 그리고 인과관계 예측이 있음. 공무원수는 행정수요에 따른 정책적 결정이므로 행정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제적 규모라고 가정하여 경제규모와 공무원수와의 인과관계(회귀분석)로 공무원수를 예측함.
- 경제적 규모가 행정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가정은 “바그너의 공공지출 증가법칙”(Wagner's Law of rising public expenditure)*이 있음

* 바그너의 공공지출 증가법칙

: 경제가 성장할수록 사회적 비용(교통, 환경, 빈부격차 등)이 발생하여 공공개입요구 증가

[그림 3-3] 공무원수 전망방법



- '91~'14년 24개년도 실적자료에 기반을 두어 1인당 실질 GDP의 로그값을 주요 설명변수로 하여 인구천명당 공무원수(반응변수)를 예측함.

< 추정함수식 >

$$N_t^{1000} = \Delta 19.383 + 6.702 \log(gdp_t) - 2.153 D_t$$

where $N_t^{1,000}$ = 연도별 천명당 공무원수
 gdp_t = 연도별 1인당 실질 GDP(사나리오별 가정)
 $D_t = 0$ when $t < 1998$
 1 when $t \geq 1998$

- 함수식에 향후 1인당 실질GDP(기재부) 및 인구수(통계청) 전망을 반영하여 향후 천명당 공무원수 도출

$$N_t = N_t^{1000*} \frac{Pop_t}{1000}$$

where N_t = 연도별 잠정공무원수
 Pop_t = 연도별 인구수

－ 최종공무원수 전망

； 지속적인 경제성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행정 수요를 감안, 공무원수가 최대가 되는 해부터 향후 공무원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최종공무원수 예측

〈표 3-5〉 공무원수 전망

(단위 : 명)

연도	인구수	실질GDP성장률	공무원수 전망
2015	50,617,045	3.60%	1,083,872
2016	50,801,405	3.80%	1,092,762
2017	50,976,519	3.80%	1,101,518
2018	51,140,690	3.70%	1,109,964
2019	51,293,706	3.50%	1,117,946
2020	51,435,495	3.30%	1,125,457
2025	51,972,363	2.70%	1,157,153
2030	52,160,065	2.20%	1,178,751
2035	51,888,486	1.90%	1,188,408
2036	51,770,951	1.87%	1,188,872
2040	51,091,352	1.64%	1,188,872
2050	48,121,275	1.26%	1,188,872
2060	43,959,375	0.87%	1,188,872

○ 연계연금선택률

－ 연계연금 선택은 선택사항이며, 최근 4년간 실제 연계 실적치는 4%로 ('09~'12) 장기재정전망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측값 필요

－ '09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에서 합의한 연계연금선택률 최고치인 20%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최근 실적을 반영하여 수정

* (최근실적) '09년3.92% '10년4.05% '11년4.93% '12년3.95%, '13년 4.6% (평균 4.32%)

* (적용가정) '15년 5%에서 1%pt씩 단계적 인상 ('30년 이후 20%)

○ 기타 제도관련 기초율 : 최근 실적치 반영

- 재직자 성별 : 일반직 (남 69.9%, 여 30.1%) / 교육직 (남 30.5%, 여 69.5%)
- 신규자 성별 : 일반직 (남 65.8%, 여 34.2%) / 교육직 (남 30.6%, 여 69.4%)

〈표 3-6〉 공무원 신규가입자 성비

구분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세 이상
교육직 (%)	남	0.00	0.00	32.18	39.78	12.50	8.30	5.05	2.19
	여	0.00	0.00	55.98	31.62	8.07	2.49	1.84	0.00
일반직 (%)	남	0.00	0.06	10.09	50.70	25.51	8.01	3.62	2.01
	여	0.03	0.09	22.45	57.50	14.73	3.77	1.43	0.00

- 퇴직연금선택률 : 일반직 (남 92.58%, 여 87.6%)/ 교육직 (남 96.2% 여 96.7%)

○ 기준소득월액 분포

- 보험료부과대상소득 추계를 위해 추계초기 전년도연도별·연령별·재직기간별·성별 기준소득월액 분포 적용
- 연금액 및 일반기여금 등의 산정 기반
- 구분기준 : 직종별(일반직, 교육직)·재직기간별·성별·연령별
- 산정구간 : 연령 18~65세, 재직기간 0~45년

○ 승급률 (직급상승률)

- 보수인상률만 외부변수로 입력을 받으면 평가모형 내부에서 승급률 자동적으로 산정

－ ● $wage(t, g, d, s) = wage(t-1, g, d, s) \times (1+r_{nom_wage}(t))$
 (t : 연도, g : 연령, d : 재직기간, s : 성별, r_{nom_wage} :
 명목보수상승률)

$$\text{예) } rate_merit(t, g, d, s, o) = \frac{wage(t, g, d, s, o)}{wage(t, g-1, d-1, s, o)}$$

※ 모형구조가 직종별 · 연령별 · 재직기간별 · 성별로 구분

－

－ 공무원의 승급률(혹은 직급상승률)은 외생변수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종별·
 성별·연령별 재직기간별 보수구조에서 직종별·성별·연령별·재직기간별로 산
 출

○ 일반기여금 외의 연금수입(행정관리비 포함) 산정시 적용비율 산출

－ 2013년 실적치 비율 적용

〈표 3-7〉 공무원연금 기타수입 전망을 위한 비율 가정

구 분	일반기여금 대비 비율
소급기여금비율	2.84%
합산반납금비율	2.88%
연금부담금비율	127.38

나 사학연금⁷⁾

□ 재정추계모형 개요

○ 2008년 개인별 모형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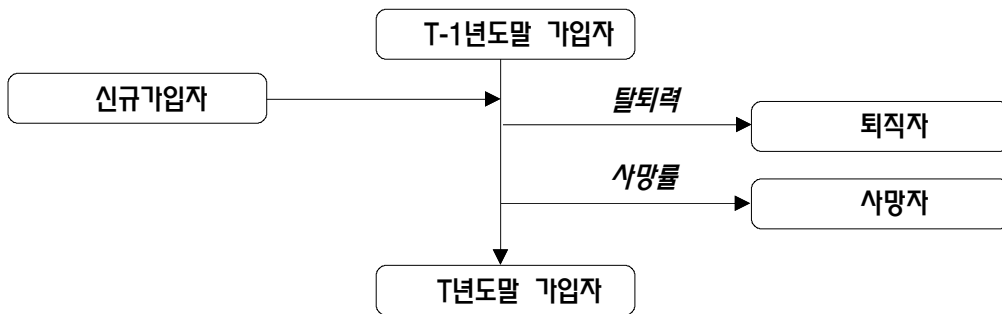
－ 기존 가입자 집단(cohort)에 기반한 추계모형에서 개인별 확률모형으로 전
 환하여 추계결과의 신뢰성 제고

7) 2015년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 제4차 회의(2015.4.3.) 발표자료 참고하여 재정리

□ 가입자수 전망

- T년도 말 가입자는 T-1년도 말 가입자에 사망자와 퇴직자수를 차감하고 신규 가입자를 합산하여 산출
 - 사망자는 사망률을 적용하고, 퇴직자는 퇴직력 적용
 - 연도별 전체 신규가입자수 전망은 최근의 신규가입자 실적을 초기 값으로 설정한 후, 최근 3년간의 신규가입자 실적자료에 기초한 신규가입자 구성 비율과 통계청의 연도별 인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직종별/성별/연령별로 산출

[그림 3-5] 사학연금 가입자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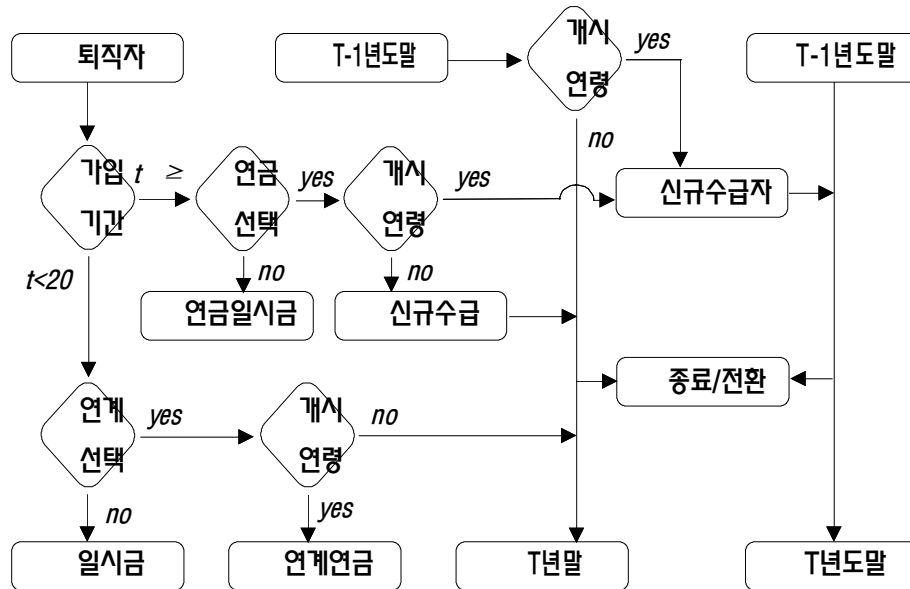


□ 퇴직연금 수급자수 전망

- 가입자 추계과정에서 산출된 퇴직자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수급자수 산출
 -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에 연금선택률을 적용하여 연금을 선택하면 퇴직연금의 신규수급자가 되고, 연금을 선택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로 산출
 - 퇴직연금의 신규수급자로 산출된 인원 중에서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인원은 수급대기자로 구분하여 연령이 수급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대기상태

-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연계연금을 선택하지 않으면 퇴직일시금 수급자가 되고 연계연금을 선택하면 연계연금 수급자로 산출

[그림 3-6] 사학연금 수급자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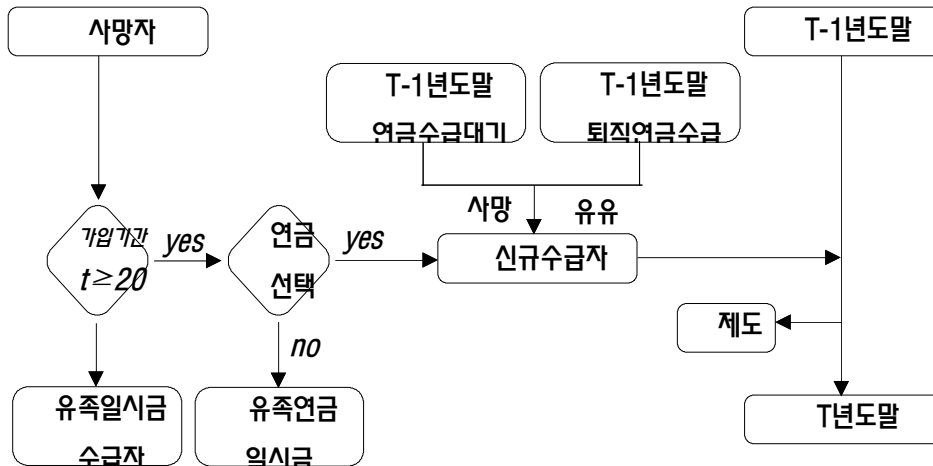


□ 유족연금 수급자수 전망

- 유족연금 수급자는 가입자 중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에서 발생하는 유족연금 수급자와 퇴직연금 수급자 및 연금 수급대기자 중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자로 구분
 - －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자는 사망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면 유족일시금 수급자, 20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의 선택에 따라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연금수급자로 구분
- 퇴직연금 수급자 및 연금 수급대기자에 사망률과 유유족률을 적용하여 유족연금 신규수급자수 산출

-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의 신규수급자와 합산
- 전년도말 유족연금 수급자 중 수급이 종료되지 않은 자와 합산되어 당년도 말 유족연금 총수급자수 산출

[그림 3-7] 사학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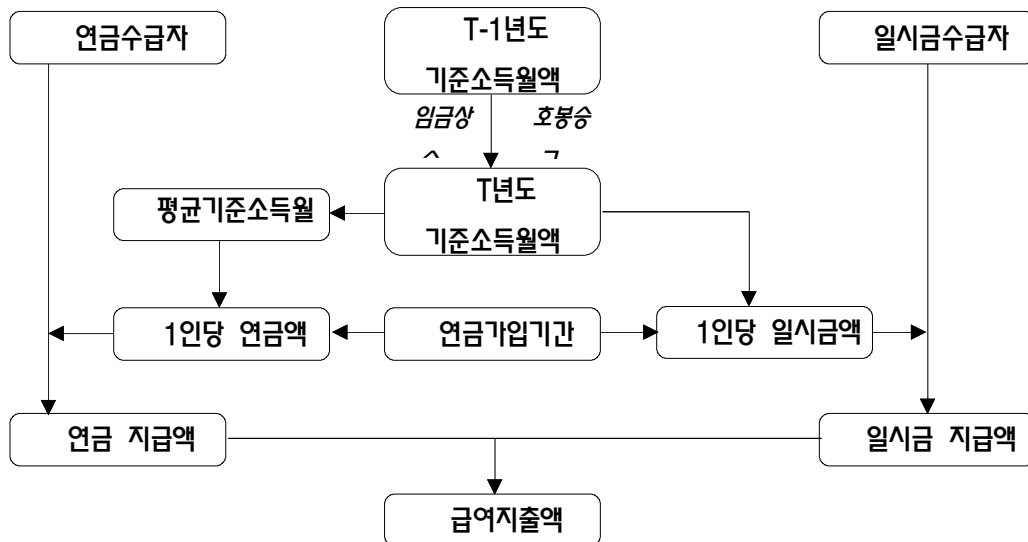


□ 급여지출 전망

- 전년도 개인별 기준소득월액⁸⁾을 기준으로 임금상승률과 호봉승급률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산출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을 이용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하고 연금가입 기간에 따라 1인당 연금액과 1인당 일시금액을 산출
 - 1인당 급여액과 일시금 수급자 및 연금 수급자를 곱하여 총 급여지출액 산출

8) 기존 제도의 경우에는 보수월액과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2013년 법개정으로 기준소득월액과 전 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담금과 급여액 산출

[그림 3-8] 사학연금 급여지출 전망



□ 기금 전망

- 가입자와 사용자의 부담금, 기금운용에 의한 운용수입의 합으로 총수입액을 산출하고, 급여지출액과 운영비의 합으로 총지출 산출
- 총수입과 총지출과의 차이가 신규 조성자금(재정수지)이 되고 (T-1)년도 말 기금액에 신규 조성자금이 합산되어 T년도 기금규모 전망

$$\text{기금액}_{\text{T년도}} = \text{기금액}_{\text{(t-1)년도}} + (\text{총수입} - \text{총지출})_{\text{t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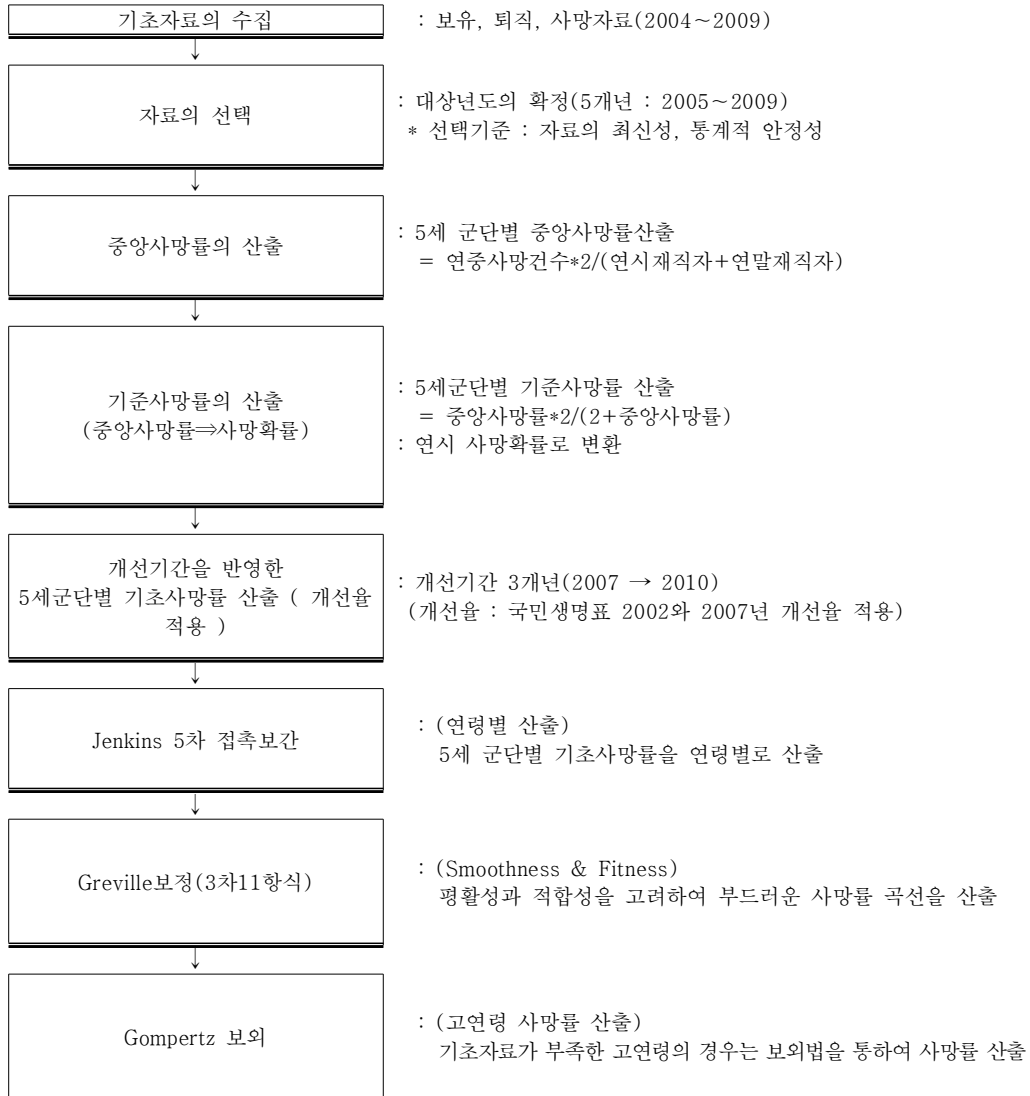
□ 주요가정

○ 신규가입자 및 구성비

- 연도별 신규가입자수 총량은 추계시작년도 직전 최근 3년간의 평균 신규가입자수에 연도별 인구증감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구성비율을 곱하여 직종별·성별·신규가입 연령별로 구분하여 신규가입자수 산출

- 신규가입자 구성비율은 과거 3년간의 경험 실적치를 기준으로 직종별·성별·신규가입 연령별로 산출

[그림 3-9] 사학연금 생명표



○ 퇴직력

- 재직자 및 퇴직자의 기초자료는 2005년도~2009년도까지 자료 이용
 - * 단, 연금개혁 상황에 따른 비정상적 퇴직행태를 배제하기 위하여 2008년 제외
- 퇴직력 산출시 초임연령은 18세로 설정하고, 정년연령은 관련 법상의 정년연령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의 퇴직 특성을 감안하여 교원은 66세, 사무직원은 62세로 가정하여 각 세별로 산정
 - * 기초자료의 통계적 유의성으로 24세 이하 저연령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24세의 퇴직력을 산정하여 18세까지 연장 적용

〈표 3-8〉 사학연금 제도내 인구수 전망

(단위 : 명)

연도	가입자수	퇴직자수	연금수급자수	
			소계	20년 이상
2014	286,598	26,660	56,641	56,466
2020	305,667	29,276	81,109	80,285
2025	313,508	31,068	112,035	109,628
2030	321,623	30,837	137,403	132,518
2035	328,149	31,298	159,884	151,079
2040	331,706	31,458	179,961	164,378
2045	331,262	31,472	198,838	172,193
2050	327,222	31,048	221,655	175,477
2055	320,225	30,361	259,245	179,755
2060	310,871	29,445	307,582	184,980

- 유유족률은 실적치의 부족으로 통계청의 연령별 유배우자비율 적용

○ 승급지수

- 직종별(교원, 직원)·성별로 구분하여 임용연령별·가입기간별로 산정하고
초임연령과 정년연령 및 산출연령은 퇴직력과 같이 각세별로 산정

○ 연금선택률

- 18세 가입연령 가정에 기초하여 연금선택 가능연령을 38세~66세 구간으로 한정하여 연령별로 산정
 - * 38세 이하 및 66세 이상의 연금선택률은 양 끝단(38세, 66세)의 선택률을 연장하여 사용
 - * (퇴직)연금선택률, 전액연금선택률, 공제일시금선택률(1-전액연금선택률), 유족연금선택률 등
- 과거 3개년도 평균으로 산정하되, 연금선택률 증가추세 반영

○ 연계연금선택률

- 연계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09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선택률에 대한 과거 경험통계치의 부재로 사전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산정
-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자는 퇴직자의 50%(퇴직 후 사학연금 재가입 등 고려 시 47.3%), 20년 이상 재직자는 60세 미만 10%, 61세 이상 0%로 가정

다. 군인연금⁹⁾

□ 재정추계모형 개요

○ 2014년 개정법 반영 : 현행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과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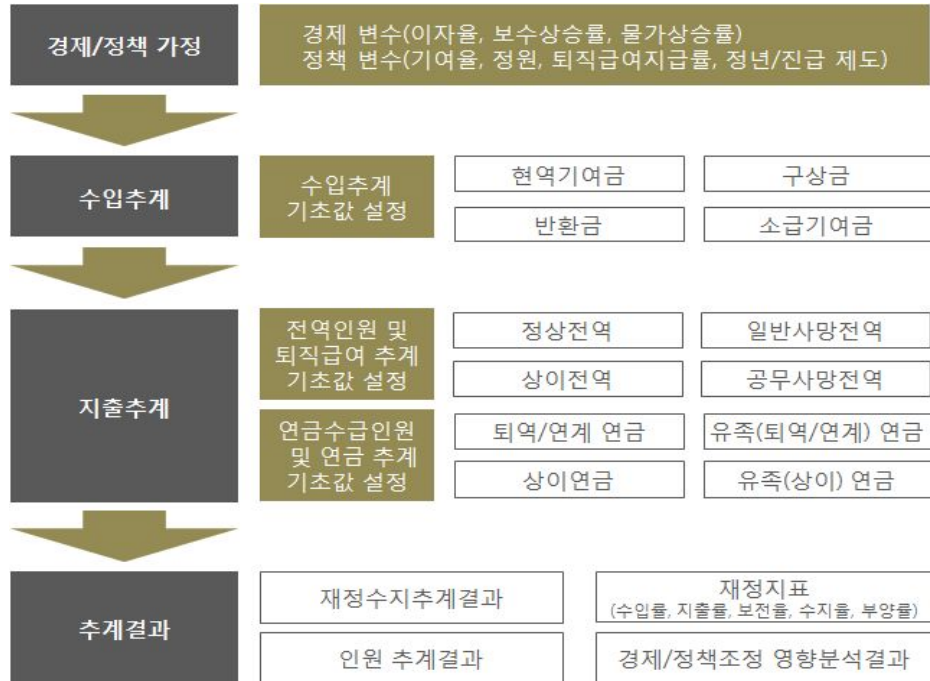
○ 군인연금 장기재정전망의 경우 전체 인구수 추계결과와 무관하게 전망

- 현역은 각 계급별 정원 및 정년, 진급최저복무기간 등 군운영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 인력은 정원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장래인구수

9) 2015년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 제4차 회의(2015.4.3.) 발표자료 참고하여 재정리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음.

[그림 3-10] 군인연금 장기재정추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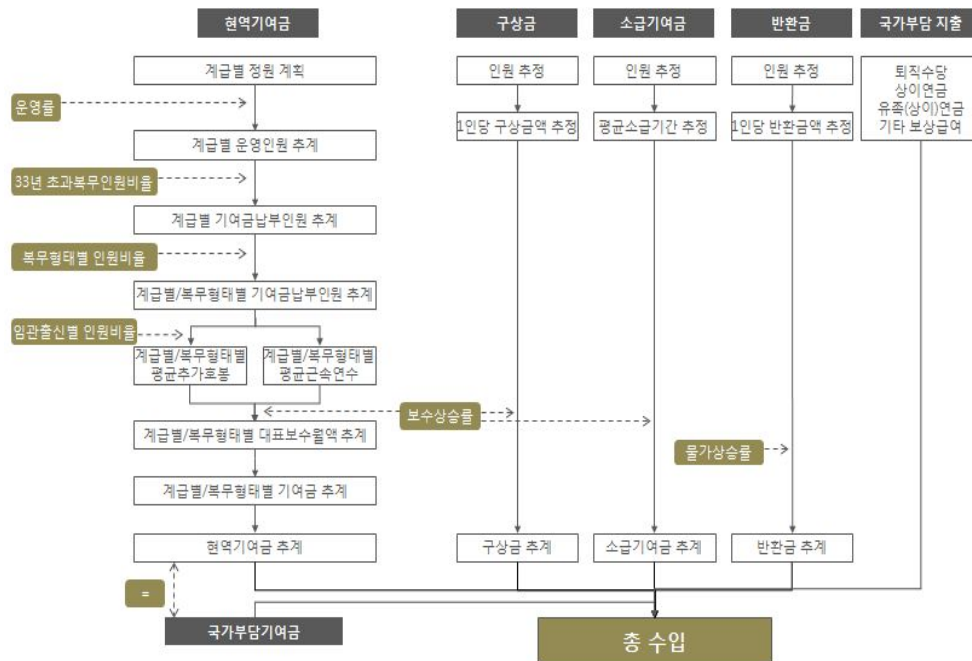
□ 수입추계

- 현역기여금, 구상금, 반환금, 소급기여금 등 항목별 수입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수입을 산정
 - 현역기여금은 매달 계급별 운영인원에 의해 결정, 운영인원의 계급별 속성(평균근속연수, 평균추가호봉 등)과 이에 의한 보수월액반영
 - 국가부담기여금은 현역기여금 추계 결과와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
 - 구상금/반환금/소급기여금 등 각 항목별 수입 추계

○ 국가부담 지출

- 상이연금, 퇴직수당, 각종 보상금 등 국가가 부담하는 보상 성격의 급여를 총수입에 합산
- 국가부담 지출 항목은 지출 추계 작업이 완료된 후 총수입에 합산

[그림 3-11] 군인연금 수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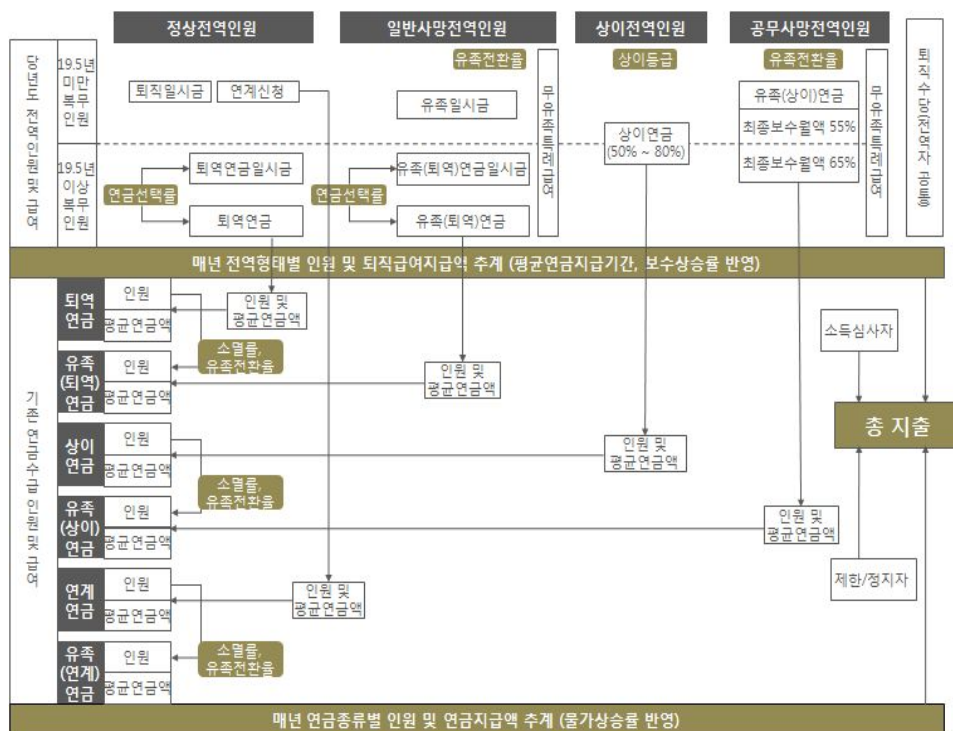
□ 지출추계

- 전역자의 퇴직급여와 수급자의 연금급여를 항목별로 추계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지출을 산정
- 전역자의 지출추계는 전역형태별/복무기간별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의 퇴직 급여 지출을 추계

- 퇴역연금은 연령별로 연초/신규/사망/연말 인원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지급액을 추계
- 유족(퇴역)연금은 퇴역연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하나, 유족연금액과 유족재전환 부분 상이
- 상이연금 및 유족(상이)연금은 퇴역연금 및 유족(퇴역)연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

○ 보상금 등의 일시금 항목을 구분하여 추계

[그림 3-12] 군인연금 지출전망



○ 정원

- 계급별 재직자(운영인원) 수는 계급별 정원과 운영률의 곱으로 산정
- 2013~2017년까지는 국방부 중기계획상의 정원을 사용
- 2018년부터는 2017년의 정원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가정

〈표 3-9〉 군인연금 연금수급자수 전망

(단위 : 명)

연도	군인 운영인원수	전역 인원수			연금수급자수	
		합계	연금수급	일시금수급	합계	퇴역연금
2014	182,113	23,110	3,001	20,109	87,214	66,919
2020	199,257	23,720	3,341	20,379	100,895	73,566
2025					110,016	78,321
2030					116,097	82,498
2035					120,635	86,303
2040					125,258	89,514
2045					129,646	92,101
2050					133,248	94,210
2055					136,232	95,794
2060					138,987	96,765

○ 연계연금 신청

- 2009년부터 시행됐으므로 누적자료가 충분치 않으나 계급별 신청인원수의 추세를 분석하여 결정
- 19.5년 미만 복무 후 전역자 공적연금 연계신청 가능
- 19.5년 미만 복무 전역자 중 연계신청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일시금 산정
- 전역 당시 연령에 따라 해당 연령의 신규 연계퇴직연금수급자가 되나, 실제 연금은 65세가 되는 해부터 수급

○ 전역률

- 계급별 정원과 운영률을 기초로 산출한 계급별 전역률을 산출하고 그 추세를 분석하여 결정
- 국방부 중기계획의 정원을 반영하여 2019년까지 전역률 설정, 2020년부터 2019년 전역률 유지

○ 연금종류별 소멸률 전제

- 연금수급자의 사망 외에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배우자 재혼, 자녀 18세 초과 등)를 포함하므로 소멸이라는 용어 사용
- Jenkins 5차 접촉보간법, Greville 3차 13항식 보정법, Makeham 보외법 등의 과정을 통해 연령별 소멸률 산출
- 100세 소멸률‘1’로 가정
- 퇴역연금수급자 연령별 소멸률

○ 기금운용수익

- 기금 운용관련해서는 별도로 전망결과 미발표
- 현재 운용하고 있는 군인연금기금은 극히 한정된 책임준비금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
- 군인연금기금의 대부분은 부동산이나 매년 연금지급 유동성을 위한 수준의 현금성 자금을 운용
- 과거 유동성 자금은 안정성을 우선하여 대부분 국공채나 은행 정기예금에 투자하였으며 향후에도 안정성을 우선한 자산운영이 예상
-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상당 기간 저금리가 유지될 전망

제3절 재정추계 발전방향(안) 모색

가. 사회보장 재정추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본목표 설정

- 사회보장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토대로 정책수요에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분석자료 제공
 - 위원회에서 재정추계 방법론, 제도개선방안, 재정전망 및 분석 등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구축
 - 사회보장 재정추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기존 재정추계의 시행과정 및 결과활용 등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실제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추계 기반강화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재정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의 개편방안 모색시 다양한 기초자료 생산
 -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경제여건 하에서 국민연금 제도성숙, 기초연금지출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중장기 사회보장재정 전망결과 자료 제공
 - 사회보장제도가 급변하는 만큼 제도 변화와 정책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형 개선
- 정부차원의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해서는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통해 추계의 방법 및 가정설정, 가정변화에 따른 재정분석
 - 사회보장 재정추계 모형구축을 통해 기본시나리오와 함께 인구경제변수 및 주요정책변수 등 가정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기존 재정추계 사후평가 및 차기 재정추계 대비 사전점검과 관련 이슈 대처가 가능하도록 모형 개발
- 현재와 미래의 사회보장지출 수준, 구성, 증가패턴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방향을

논의할 때 사회보장지출 전망과 함께 재원별 부담수준 등 재정적 지속가능성 점검을 위한 분석

- 이를 위해 사회보장 재정추계결과를 토대로 지출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수준, 재원부담 등 재정여건 분석을 위한 방법론 연구
- 향후 증가할 지출수준에 대비한 부담수준,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논의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 재정평가지표 모색
- 지출증가에 따른 부담수준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인상 등 사회보험 제도개선, 국가재정수지와 국가부채 등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모색
 - － 향후 증가할 사회보장 지출에 대비한 국민부담수준 분석을 위해 GDP 대비 조세수입(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수준(사회보장부담률)에 대한 논의의 토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현재와 미래의 급여수준과 대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출구조 변화와 급여수준의 적정성 등 심층분석

- 재정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급여수준의 변화와 노령·근로계층 등 수급대상별 지출구조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분석

□ 사회보장재정의 평가 및 발전경로와 환경변화에 대한 해외주요국의 사례 비교 및 시사점 도출

- 전체 국가재정과 사회보장재정으로 국한할 경우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기준과 재정목표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
- 해외 주요국 사회보장재정의 발전경로와 환경변화 비교 분석

□ 사회보장제도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재정과 기초연금 등 일반세출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사회보장재정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제도별·제도간 복잡성을 보다 정교하게 구현하기 위한 모형 고도화

- 사회보장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중장기 측면에서 재정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적정 부담수준 등 재정여건 분석을 위한 사회보장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모색
- 사회보장재정이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정책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사회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보장과 경제 선순환 지출구조 분석을 위한 모형 구축 및 방법론 연구

〈표 3-10〉 사회보장 재정추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추진과제(안)

추진 과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재정추계모형 기본틀 구축(3개년도)	●	●	●			
인구거시경제변수 및 주요정책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모형 개선	●	●				
사회보장재정의 장기지속가능성 점검 및 재정여건 분석을 위한 방법론 검토			●	●	●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개선 및 고도화				●	●	●
사회보장 재정추계 시행(2년마다)		●		●		●
최근 제도개선 및 신규제도 도입, 지출범주 설정 등 이슈를 반영한 모형 개선	●		●		●	
사회보장 재정추계결과를 활용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한 심층분석	●		●		●	
해외 주요국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제도개선 등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재정 발전경로 비교			●		●	
사회보장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연구			●	●	●	

주: 2017년 등 홀수연도는 격년마다 시행하는 재정추계 시기

나. 재정추계 발전을 위한 운영방식 개선

-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회보장기
본법의 재정추계 원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재정추계 중장기 발전
방향 모색
- 차기 사회보장재정추계를 위해서는 사전에 및 현안 반영 등 필요한데, 이는 다년
에 걸친 연구가 중장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013년과 2015년 등 기존 재정추계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는 문제점을 보완
하여 추계방법론 및 모형을 보완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필
요
 - － 예로,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등 모형구축, 순사회복지지출 범주에 따른 장
기전망, 사회보장지출증가에 따른 부담수준 분석 등 주요이슈는 상당한 연
구기간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연구과제 수행이 뒷받침 되어야 함.
 - 차기 재정추계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이슈를 점검하고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별로 매년 연구계
획 수립하여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 또한 격년마다 시행하는 재정추계 당시에는 다룰 수 없는 사전에 미리 점검
및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재정추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
안 모색
 - 2013년과 2015년 등 기존 재정추계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는 문제점을 보완
하고 최근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형 개선이 필요하므로 이
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
-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제도 안정성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도출시 기초자
료로 활용할 심층분석
 - 재정추계 시행연도에는 사실상 장기재정추계 방법론과 전망결과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비 추계연도에는 전망결과를 활용한 심층분석을 시

행할 필요가 있음.

- 비추계연도에 심층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격년마다 시행하는 재정추계 시 마다 필요성 제기

○ 지출구조 변화와 함께 노인 근로계층 등 세대내 세대간 대상자별로 급여수준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서 정책적 시사점 모색

○ 장기 재정추계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근로계층과 노인세대간 급여지출 적정성, 세대간세대내 사회보장급여의 우선순위, 사회보험재정과 일반예산의 지출비중의 적절성 등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주요 국정과제 추진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지출증가에 따른 부담수준 등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여건 진단 및 정책과제 제시

○ 우리나라 사례와 함께 OECD 등 주요국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제도성숙 시점 등을 함께 연계하여 사회보장재정의 과거 발전경로를 분석함으로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해외사례 연구 필요

□ 차기 사회보장재정추계 대비 모형 보완 및 고도화, 심층분석 등 재정추계 기반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추진 및 이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예산 확대 등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기존 재정추계에서 제기된 바 있는 이슈와 최근 제도변화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형 보완 및 방법론상 개선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 및 예산 확대 필요

- 국가재정법상 최소 5년마다 시행하는 장기재정전망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장기전망센터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데, 연구사업 계약체결이 아니라 매년 센터운영비 13억원으로 추계작업 수행

○ 추계연도 뿐 아니라 비추계 연도에서도 재정추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모형 고도화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지속적으로 운영

- 재정·통계전문위로 합쳐지면서 재정추계과정 전반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로 확대구성된 자문단 주기적으로 운영
- 자문단은 재정추계모형 구축, 심층분석, 재정추계결과 활용방안 등 주제별로 그룹화하여 논의 활성화

다.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등 재정추계 모형개발

□ 그간 2차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시행한 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추계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재정추계 주체간 재정추계 주기*와 지출추계 범주, 목적 등이 서로 상이한데, 재정추계 결과의 정합성을 위해 사회보험의 경우 소관 기관별로 추계결과 원용

- 추계 주기: 사회보장재정추계 2년(2013년 부터), 장기재정전망 5년(2015년 최초 시행), 국민연금 5년(2018년 예정)

○ 사회보험 제도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별 분석 등이 제외되고, 사회보험료와 재정수입 등 수입을 배제한 총 지출 규모만 추계

- 중앙정부재정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에 목적이 있는 재정전략협의회의 장기전망과 달리,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사회보장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추계목적에 차별성이 있음.

- 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지출 및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관리에 목적이 있는 반면, 사회보장위원회 재정추계는 사회보장제도로 한정하여 지출의 구성과 수준, 재원부담 등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개선안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음.

* 협의회도 사회보장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의 경우 각 소관기관별 수입과 지출 전망결과 원용

□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보다 전문성이 높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반강화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재정추계 취지에 부합하는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 추계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데 활용하고자 중장기에 걸쳐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재정추계 모형 개발
- 사회보험 재정추계 방법론에 대한 검토 및 전망결과에 대한 방법론 인구 재정추계의 기초가 되는 가정변수, 추계범위, 추계모형·방법 등의 검토 및 설정시 논의의 활성화 및 기초자료 제공차원에서 자체 모형 개발 필요
 - 현행 제도 유지에 따른 기본 시나리오만 전망하고 인구·거시경제변수 가정 및 제도관련 변수 가정변화에 따른 시나리오와 민감도 분석 부재
 - 2013년과 2015년 전망결과에 대한 비교 및 요인 분석 등 해석 필요
- 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반을 강화하고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재정추계모형 개발을 3년에 걸쳐 연속 과제로 수행
 - 모형의 기본틀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논의의 활성화와 기준에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재정추계를 고려하여 재정추계 방법론은 각 제도별 담당기관의 모형을 기본으로 함.
 - 모형의 기본틀을 완료한 후 추후과제로 각 제도별로 우리나라 제도의 특수성 및 실적자료의 축적 등을 고려하여 방법론상 보완방안 모색
- 1차년도 연구로는 2015년 재정추계시 주요 이슈가 된 바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추계 방법론을 검토하고 담당기관의 기존 방법을 토대로 모형 개발
 - 2013년과 마찬가지로 2015년에도 사회보험과 기초연금은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전망결과를 원용하도록 하였으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출전망의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에 전망한 경제변수 가정을 반영한 전망결과를 제공
 - 기초연금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달리 2014년 경제변수가정을 적용하되,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는 기초연금 매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로 가정

하여 법상 5년마다 노인생활수준 및 빈곤 등을 반영하여 재평가한다는 내용을 미반영

- 고용보험은 2013년과 2015년 사회보장 재정추계시 모형이 서로 다르고, 2013년에는 주기적으로 외부 경제위기 쇼크를 반영한 반면 2015년에는 최근 지출증가 추세를 따르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일반재정 LMP 사업 포함)에 대해 재정추계 방법론, 분석을 위한 가정, 전망결과 등 2013년과 2015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고용보험 재정추계 방법론 비교 분석
 - 국민연금 등 모형 보완, 경제변수 및 정책변수 가정 등 변화 요인별 분석
 - 모형 보완, 경제변수 및 정책변수 가정 등 변화 요인별 분석

□ 2차년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 3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사회보험제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산재보험에 대한 재정추계 모형 개발¹⁰⁾

- 건강보험의 경우 장기전망방법론 및 가정설정 등에 대해 2013년과 2015년 재정추계시 마다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특히 소득탄력도,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건강수명 등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지출규모가 큰 폭으로 달라져서, 가정변수 별 민감도 분석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3년에 비해 2015년 재정추계시 2014년 7월 장기요양보험 등급개편을 반영하여 장기전망

- 등급별 수급률 등 가정변화에 따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등급개편이후 실적분석을 통해 제도관련 변수 가정 검토

- 건강보험지출은 OECD(2012) 방식을 따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EU방식,

10) 사회보험제도 중 별정우체국연금을 전체 사회보장 재정추계시 포함하고는 있으나 공무원연금과 제도 내용이 동일하고 상대적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규모가 적어서 별도 모형으로 개발하지는 않음.(공무원연금 보험료수입과 급여지출 증가추이를 반영하여 장기전망)

이를 모두 포괄하는 공공의료비와 국민의료비 지출은 OECD(2012) 방식

-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가정 설정과 각 개별 제도간 가정설정은 서로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전망하고 있어 의료비 지출 추계시 의료급여 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제도간 연관성 등 검토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최근 이루어진 법개정 반영 및 보수인상률 가정 등에 대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모형 개발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2015년 개정법을 반영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원용한 바 있으나, 법개정 내용을 어떠한 식으로 반영하였는지 가정변화 및 모형 수정에 대한 검토없이 전망결과 원용
- 3대 특수지역연금의 보수인상률은 민간근로자의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가정을 반영하여 기본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어 타 제도간 비교 및 전체 사회보장지출 수준 전망에 있어 한계가 있음.
- 보수인상률 등 가정변화에 따라 재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민간근로자의 임금상승률과 동일하게 가정할 경우 각 제도별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점검

○ 산재보험은 사실 정부에서도 2013년 처음으로 장기재정추계 모형을 개발하는 등 타 영역에 비해 방법론 등 보다 근본적인 검토 필요

- 재해율 수준 및 개선시기 등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지출 및 수입 등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주요 가정변수에 대한 검토 및 가정설정 등에 대한 근거 마련

□ 2차년도에는 2016년 발표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하여 경제성장률, 물가, 금리, 경제활동참가율 등 거시경제변수 장기전망 방법론 검토

○ 물가, 중요소생산성, 노동공급, 자본스톡 등 거시경제지표 장기전망시 인구구조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 모색

- 그간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시 경제변수가정은 기획재정부의 협의회 전망 결과를 원용하였으나 2015년말 국가재정법상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여 최소 5년 후 발표예정으로 비추계기간에는 경제변수가정을 전망

- 2차년도에 이어 3차년도에는 장래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경제성장률, 물가, 금리, 경제활동참가율 등 거시경제변수 장기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기존에 구축된 8대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등 모형 안정화를 위한 수정보완하여 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본틀 구축 완료
- 2차년도에서 검토한 거시경제변수 장기전망 방법론에 따라 모형을 구축하여 2013년과 2015년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와 비교 등
- 8대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등 개발된 모형에 대해 기초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최근 도입되거나 제도변화에 따라 실적자료 분석 등을 통해 기초율 재검토
 - 예를 들어 사학연금의 경우 2016년 사학연금 재정계산시 개선된 방법론을 반영한 모형 개선 및 사립대학병원으로 사학연금 가입대상 확대 등 반영, 군인연금법 개정시 이를 반영한 모형 수정 등
- 거시경제변수 가정변화를 반영한 8대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 재정전망결과 시산결과 검토
 - 각 모형별로 개발자를 제외한 외부전문가 모형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모형 수정 보완

〈표 3-11〉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등 재정추계모형 개발 (3개년도)

추진 과제	2016년	2017년	2018년
국민연금	●		
기초연금	●		
고용보험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산재보험		●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거시경제변수 장기전망		●	●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경제변수 장기전망 모형 안정화 및 검증			●

주: 사회보험제도 중 별정우체국연금을 전체 사회보장 재정추계시 포함하고는 있으나 공무원연금과 제도 내용이 동일하고 상대적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규모가 적어서 별도 모형으로 개발하지는 않음.

〈표 3-12〉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제도별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따른 주요기대효과

추진 과제	모형개발에 따른 기대효과
국민연금	-타 제도와 동일한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반영한 사회보장 지출전망 -수급연령 인상, 보험료율 인상 등 정책현안별 재정분석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매년 인상 가정별 지출규모 전망 및 비교 -통계청의 인구시나리오별 지출규모 전망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차등지급 대상자 규모 추정 -국민연금 제도변화와 연계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출전망 -수급연령 인상, 독거노인가구 비중 증가 등 주요정책 가정별 지출규모 전망 등
고용보험 (일반재정지출 LMP사업 포함)	-2013년과 2015년 재정전망 방법론 비교 및 검증 -2015년 재정추계모형에 2013년과 같이 주기적으로 외부 경제위기 쇼크를 반영할 경우 지출증가 추계 분석 -법상 적립배율 2배 수준 유지하는 경우 등 기본시나리오 설정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건강보험	-최근 실적자료를 반영한 OECD(2012) 방식으로 지출 전망 -건강한 노령화 효과 반영 및 잔차요인 세분화 -소득탄력성,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등 주료가정변화에 따른 지출규모 전망 -지출전망과는 별개로 전망되는 보험료 부과대상소득 장기전망 방법 검토 및 개선 -부과방식 보험료율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	-최근 실적자료를 반영한 등급개편에 따른 관련 기초율 재검토 -중장기 발전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 개발 -요양보험 수급률 가정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무원연금	-2015년 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재정추계 방법론 및 관련 기초율 검토 -퇴직연금 등 연금회계상 급여를 제외한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등 장기추계모형 개발 -보수인상률을 민간근로자의 임금상승률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는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학연금	-2015년 4차 재정계산시 개선된 재정추계모형 반영 -2015년 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재정추계 방법론 및 관련 기초율 검토 -사학연금 가입확대(사립대학병원 등) 등에 따른 재정분석 -보수인상률을 민간근로자의 임금상승률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는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군인연금	-보수인상률을 민간근로자의 임금상승률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는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산재보험	-최근 실적자료 분석을 토대로 재해율 등 주요정책변수 재검토 -재해율 등에 대한 민감도 분석

주: 사회보험제도 중 별정우체국연금을 전체 사회보장 재정추계시 포함하고는 있으나 공무원연금과 제도 내용이 동일하고 상대적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규모가 적어서 별도 모형으로 개발하지는 않음

○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 회의 개최

- 각 연구내용의 검토 및 보완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세미나, 최종보고회 및 위원회 개최
- 분야별로 재정추계 기초율 검토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위원회 10회 개최
- 연구진행과정 중 연구진간 교류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 영역별 자문회의 개최
- 우리나라의 8대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현안 파악 및 재정추계 방법론 및 문제점 등에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을 위한 최종보고회 개최

제 4 장

결론 및 향후과제

-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재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다 신뢰성 높은 재정추계결과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2년마다 정부차원에서 사회보장 재정추계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사회보장재정추계 전반에 대한 시행과정을 살펴보고 추계기간과 추계 범주 등 재정추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추계 발전을 위한 향후과제를 살펴보았음.
- 2013년에 시행된 장기재정추계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의 사회보장 재정전망결과를 통해,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지출 증가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방향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정부차원의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격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재정추계과정 전반에 대한 공론화 및 논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계범주 및 기간, 추계모형, 가정설정 등 확정
-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재정추계인 만큼 특수직역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추계방법론 검토를 통해 신뢰성을 보다 높이고 재정추계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 재정추계시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각 제도별 추계위원회 결과를 원용하고 모형 및 주요가정변수 등 추계방법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하는 형태를 통해 검토한 바 있음.

- 전체 사회보장재정 중 사회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회보험 재정추계모형과 제도관련변수 가정 등에 따라 사회보험 재정추계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방법론 측면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관련된 핵심과제는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고령화 요인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나아가 평균수명 및 출산율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있음.
 - 평균수명 및 출산율 등 인구관련 전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결과를 원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에 이어 2016년에 인구추계를 발표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인구추계결과에 따라 성장률, 노동시장 등 거시경제변수 관련 전제 또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됨.
 - 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재정추계에서는 2016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및 이를 반영한 거시경제변수 전망 등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음.
- 장기재정추계의 시행 목적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 재정목표나 평가기준 모색 필요
 - 사회보장 재정수입은 일반적으로 세금, 사회보험료, 국가부채 등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공정한 복지정치를 위해 구체적으로 추계된 수치를 국민들 사이에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치적 소통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추계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 활용방안측면에서 장기전망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제공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인구고령화와 공적연금제도의 성숙으로 인해 노령정책 관련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사회보장재정 전망결과를 토대로 적정지출수준과 국민부담 등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향후 한국형 사회보장제도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정부차원에서 보다 신뢰성 높은 전망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공론화 필요
 - 특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방향 모색
- 지출증가에 따른 부담수준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인상 등 사회보험 제도개선, 국가재정수지와 국가부채 등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는 모형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 향후 증가할 사회보장 지출에 대비한 국민부담수준 분석을 위해 GDP 대비 조세수입(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수준(사회보장부담률)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음.
- 사회보장 재정추계 전반에 걸친 과정과 결과발표 등 거버넌스 관점에 있어 「장기 재정전망협의회」 및 관련 정부부처와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험은 8개 제도별로 전망결과와 장기전망을 위한 가정 등 전망과정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점검하고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제도의 특성상 중장기간에 걸친 전망결과를 분석하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법론과 관련 가정을 살펴보고 전망결과를 분석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음.
 - 사회보험재정에 대해서는 기본시나리오에 대한 전망결과발표는 정부의 전망결과를 반영하되, 기초율 가정과 재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자체 모형 개발의 필요성 대두
-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 등 사회보장 기본법의 재

정추계 목적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필요

- 그간 2차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시행한 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추계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함
 - 재정추계 주체간 재정추계 주기*와 지출추계 범주, 목적 등이 서로 상이한 데, 재정추계 결과의 정합성을 위해 사회보험의 경우 소관 기관별로 추계결과와 원용

*추계 주기: 사회보장재정추계 2년(2013년 부터), 장기재정전망 5년(2015년 최초 시행), 국민연금 5년(2018년 예정)

- 사회보험 제도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별 분석 등이 제외되고, 사회보험료와 재정수입 등 수입을 배제한 총 지출 규모만 추계하는데 기인함
- 중앙정부재정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에 목적이 있는 재정전략협의회의 장기전망과 달리,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사회보장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추계 목적에 차별성이 있음.

- 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지출 및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관리에 목적이 있는 반면, 사회보장위원회 재정추계는 사회보장제도로 한정하여 지출의 구성과 수준, 재원부담 등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개선안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음.

* 협의회도 사회보장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의 경우 각 소관기관별 수입과 지출 전망결과 원용

- 따라서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보다 전문성이 높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재정추계 기반강화 방안 모색 필요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재정추계 취지에 부합하는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 기반강화 방안 모색 필요
 - 사회보장 지출수준 및 재원부담,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에 관한 논의·분석이 가능한 독자적인 재정추계모형 구축과 추계범위 확대, 사회보장 재정추계 전담기관에 대한 예산 등 지원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공무원연금공단(2015). 2014 공무원연금 연차보고서.
- 기획재정부(2015).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박형수·전병목(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조세연구소.
- 신화연 외(2013).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화연 외(2014). 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반강화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2010년~2060년.
- Adema, W., P. Forn and M. Ladaïqui (2011).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124.
- Alberto Andreoni and Maria Nadia Postorino (2006). A Multivariate Arima Model to Forecast Air Transport Demand. Applied Methods in Transport Planning.
- Anderson Barry and James Sheppard (2009). Fiscal Futures, Institutional Budget Reforms, and Their Effects: What Can Be Learned? *OECD Journal on budgeting*. 2009(3), pp.7-109.
- Bartosz Przywara. (2010), Projecting Future Health Care Expenditure at European Level: Drivers, Methodology and Main Results, European Economy, Economic Papers 417, July 2010.
- Economics Department, Economic Policy Committee (2012). Public Spending on Health and Long-Term Care: A New Set of Projection, Working Party No.1 on Macroeconomics and Structural Policy Analysis, ECO/CPE/WPI(2012)23.
- European Commission (1999). *Generational Accounting in Europe*.
- European Commission (2011). The 2012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 Eurostat (2011). Public health data base. available at: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health/public_health/data_public_health/database.
- Gruber, J. and D. A. Wise. (2002).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fiscal implications—Introduction and summary. NBER Working Paper No. 11290.

- Mark J. Warshawsky (1994). Projections of health care expenditures as a share of the GDP: actuarial and macroeconomic approaches, Health Services Research. Health Services Research, 29(3): pp.293-313.
- Mark J. Warshawsky (1999). An Enhanced Macroeconomics Approach to Long-Range Projections of Health Care and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as a Share of GDP, Journal of Policy Modeling, 21(4): pp.413-426.
- OECD (2012). Public Spending on Health and Long-Term Care.
- OECD (2013). Historical Population Data and Projections(1950~2050).

[부록 1] 특수지역연금 재정재계산 관련 근거 및 추진현황

1. 공무원연금

□ 추계목적

- 연금제도의 장래 재정상황(financial status)과 경향(trend)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도별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및 각종 재정지표를 전망
- 연금제도가 재정적으로 건전한 상태에 있는가를 진단하며, 재정건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절한 재정확보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

□ 근거법령

- (공무원연금법) '9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최소 5년 주기단위의 재정재계산 제도가 명문화(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됨으로써 변화하는 연금환경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연금재정상황을 전망·진단하여 공시하는 재정평가제도를 도입

<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비용부담의 원칙)>

-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추계연혁

- '00년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구축
- 재직공무원과 연금수급자 분포구조의 세분화에 기반한 인원추계로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 분포구조 변화(장기재직 경향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중장기 재정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 '02년 재정추계 검증(KDI) 및 재정추계연구보고서 발간
- '04년 기초율 용역(사회보험연구소)
- 사망율, 가입자 전망 등 각종 기초율 추정에 있어 인구학적, 통계적 처리과정이 보강됨으로써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각종 내·외적 장단기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도태를 마련하게 되었음.
- '06~'09년 연금법 개정과정에서의 재정추계 검증(재정분석위원회)

【 재정재계산 연혁 】

- '95년 재정재계산 제도 법제화(5년 주기)
- '99년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개선 방안(KDI,용역)
- '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제1차 재정재계산,공무원연금제도개혁기획단)
- '05년 재정재계산 보고서 발간
(제2차 재정재계산, 안행부와 공단 공조로 자체 실시)
- '06년 재정안정화와 제도선진화를 위한 공무원연금정책연구(KDI,용역)
- '07년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개선 및 제도선진화를 위한 정책건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 '08년 공무원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안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 '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 '10년 지난 '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후 재정 추계만 실시(제3차 재정재계산)

□ 공무원연금 기금운용관련

- 공무원연금법 제73조에 근거하여 연금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의 유지·관리를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 공무원연금법 제69조의2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
 - 2009년 연금개혁으로 신설된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기금의 수익금으로 정부가 부담할 보전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금재정에 대한 기금의 역할이 보다 분명하게 되었음.

2. 사학연금법

- 재정재계산은 사학연금법 제43조(비용부담의 원칙)에 근거하여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 제1차, 2006년 제2차, 2010년 제3차에 이어 2015년 4차 재계산을 시행함
- (사학연금법) 제43조(비용부담의 원칙)
 - 급여나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함
 - 1995년도의 연금법·령 개정으로 최소 5년 주기의 재정재계산 제도가 명문화됨으로써 적립방식에 기초하여 사학연금 재정이 장기적인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도입되었음

3. 군인연금법

- 2002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5년 주기로 군인연금 재정추계와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구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명시
- 1997년 국가부도로 인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의하여 1998년 공적연금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개선방안을 마련 시 관련 장기재정추계가 필요하여 개략적 모형으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
- 군인연금 장기재정추계는 1997년 이전에는 개념이나 방법에 관한 연구가 없었으며 군인연금법 개정 후 첫 보고 시기인 2007년도 국회 보고를 위하여 국방연구원에서 처음 장기재정추계 연구를 수행

[부록 2] 주요국의 장기재정전망

	공식적인 발표 의무사항 근거	발표 형태	재정추계 추진 및 발표주체	재정추계 범위	재정추계 기간	추계 빈도
호주	Chapter of Budget Honesty 1998	Intergenerational Report 2007/2008	Department of the Treasury	중앙정부	40년	최소한 3년 주기
캐나다	—	Staff working papers	Department of Finance	일반정부	40년	수시 결정
덴마크	EU Stability and Growth Pact	Convergence programme Report	Ministry of Finance	일반정부	2070년까지	매년
독일	EU Stability and Growth Pact	Second Report on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Federal Ministry of Finance	일반정부	2050년까지	최소한 4년 주기
한국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보장위원회	중앙및지방 정부	2060년까지	수시 결정
	국가재정법	2060 장기재정전망	재정전략협의회(기획재정부)	중앙정부	2060년까지	수시 결정
네덜란드	EU Stability and Growth Pact	Ageing and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Central Planning Bureau	일반정부	2100년까지	수시 결정
뉴질랜드	Public Finance Act 1989	New Zealand's Long-Term Fiscal Position	New Zealand Treasury	중앙정부	40년	최소한 4년 주기
노르웨이	—	Long-Term Perspectives for the Norwegian Economy	Ministry of Finance	일반정부	50년	최소한 4년 주기
스웨덴	EU Stability and Growth Pact	Sweden's Economy (Budget Bill)	Ministry of Finance	일반정부	2060년까지	매년
스위스	—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in Switzerland	Federal Finance Administration	일반정부	50년	최소한 4년 주기
영국	Code of Fiscal Stability 1998	Long-Term Public Fiance Report	HM Treasury	일반정부	50년	매년
미국	—	Analytical Perspectiv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중앙정부	75년	매년
	—	Long-Term Budget Outlook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중앙정부	75년	2년 주기
	—	The Nation's Long-Term Fiscal Outlook	Government Accounting Office	중앙정부	75년	연 3회